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6년9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1. 경제에 관한 질문 ..... 1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내일 하루가 남았고 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교섭단체대표의

원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진광관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이 검토됩니다.

기재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 장관님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사업별 통계수치에 의존해서 경제성 위주로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또 정책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또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사업별로 평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유관사업과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단절구간, 미싱 링크(missing link)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전체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우선 단절구간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부합성 이런 것도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절구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만 현재로서도 그것이 전혀 고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재무 부처가 관할, 담당이 아닌……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입니다만 국토교통위에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철도라든가 댐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SOC 사업과 관련돼서 재무 부처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대형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이따 도표로도 나오겠지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통합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그 취지와는 달리 개선해야 할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도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도입이 될 때는 과거 각 부처별로 SOC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개선을 하고 해서 이게 정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중도 그 사이에 늘어났고 균형발전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도로 다 부처로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자료 스크린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 영국을 비교해서 주의해서 볼 점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개별사업 평가 방식이 개별사업이라는 것, 다른 나라는 일괄 평가 방식이고 교통사업 결정도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주요 국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본,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 방식이 모두가 일괄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개별사업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결정권을 갖는 부처가 다른 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처, 다시 말해서 교통부가 결정권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저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마냥 기획재정부가 사업 결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저런 부분이 각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 결정권까지 기재부가 갖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저 사업 결정권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 배정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될 텐데 저희가 예산을 중앙부처의 어떤 한 특정, 그것이 예산청이라는 형태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됐든 그런 것으로 통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 그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제도는, 하여튼 예산 주관 부서는 한 군데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사업 결정권을 제가 정확히 다른 나라가 어떤 뜻으로 결정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지 예산 배정의 권한을 가진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 저희보다 선진국인 이런 나라에서도 예산편성 절차를 지금 도표에서 보셨듯이 담당 소관 부처에서 철저하게 B/C 분석이라든가 AHP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면 각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는 사실상 계획만 세우지 어떻게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그런 예비적인 단계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각 사업 부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좀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총액…… 톱다운 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업의 경우는 여러 필요에 의해서, 지역적 수요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대두가 됐을 때 그것을 통괄해서 컨트롤한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그 컨트롤이 예산에 한정시켜서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처를 통괄을 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예산 요청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여기 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소관 부처에서 저 같은 경우 국토교통위를 설득을 하고 또다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물론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타제도 자체는 KDI의 공공투자 그쪽에서 말하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사실은 예타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타라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것이……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 방향으로 발전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의 예산 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그것은 거의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가 된 것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진규 의원** 예타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함진규 의원** 예타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대서 또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경우가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제가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 각 부처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242건인데 70.6%인 171건이 통과되었고 25.2%인 61건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함진규 의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담당 부서가 아닌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도로·철도 건설,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 사업의 경우에 기재부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교통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런 말씀은 못 들어 봤습니다.

○**함진규 의원**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예타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업들이 한 번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도 못하고 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폐해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처음 도입된 취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꼭……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합니까. 소위 그래서 B/C 비율이 1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있고,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AHP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1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과연 이 사업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를 좀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타제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함진규 의원** 그 분석하고 따져 보는 것을 각 부처에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모든 사업의 성패가 시기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부에서 예타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1년 이상씩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B/C 분석에 있어서도 1은 되고 0.98은 안 되고 이런 것도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함진규 의원** 저는 이런 세계적 추세 그리고 행정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

다시피 예타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저희도 시간을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KDI 쪽에다 권고도 그렇게 짧게 할 수 없는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그만큼 필요한 절차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게 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것을 줄일, 최대한도로 줄여 볼 수 있는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비타당성제도라는 것이 누차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도 도입된 취지가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어차피 쓰는 일인데 그것이 과연 긴급하고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것이고 그런 취지는 살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함진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4번이요.

저 노선을 장관님 한번 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보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신안산선인데 애초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빨간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국토부 거쳐서 예타 기재부에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저 구간이 9.7km입니다. 전철을 왜 만듭니까? 사람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함진규 의원** B/C 분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9.7km를 지나가는 게 산속으로 지나갑니다, 사람 사는 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부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을 해서 결국 사람 다니는 노선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저런 게 바로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예산만 갖고 다루다 보니까 전철이 산으로 가는지, 사람이 있는 데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지도를 보니까 붉은 선, 원래 선이 제가 지도만 봐 가지고는 인구가 없는, 사람이 없는 쪽을 가게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재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타에 있어서 그런 현실에 동떨어진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개별사업별로 얼마든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다 100점 짜리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도 자체는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진규 의원**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 것같이 보입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개선을 해 왔고요. 또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AHP 같은 것이 도입된 것도 원래 제도가 시작된 후에 이런 것은 일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을 받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도 진입하기 전에 선진국형 저성장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국가경쟁력이 지금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2.8, 한국개발연구원이 2.6 등등 저성장을 예기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 우리의 초기 고도성장기에 비해서 지금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맞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경주해서 지금의 저성장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세계경제포럼(WEF)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3대 약점 요인이 제도적인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법체계의 효율성, 정부 규제 부담, 이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도권 의원으로서, 전경련이 지난 5월 10일 날 규제 개혁이 필요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경우 11조 4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발표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해당 보고서 내용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도 이미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정부 정책이 확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수도권을 읊아매서 규제를 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이 발전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편승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서울을, 수도권을 규제를 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때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정부는 왜 소신 있게 그렇게 못 하나요? 지방 의원들을 너무 의식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지역을 읊아맨다 이런 생각으로 수도권 규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많은 개발 또 과밀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해소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가 장기화되고 또 넓은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

하면서, 그러나 급격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역별로 좀 특화된 규제 개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술하게 대정부질문을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감히 이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을 크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부에서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 결정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것 금년 내에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발전과 또 특별히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끝으로 세월호조사특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아마 다 같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명확히 원인을 밝히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기 문제 논란 그리고 또 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제대로, 다른 법원이나 검찰이나 해심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거 갖고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특조위에 93명의 직원이 있는데 선체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에 선체조사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보다도 실질적으로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선체조사단 같은 것을 국회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위원을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세월호가 아직 인양이 되지 않았으니까, 인양이 되면 그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구성원들이나 또 유가족들이나 같이 참여해서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말이지요, 그 특위에만 그것을 맡겨 놓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 여야 또 유가족 다 포함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책임 의식을 갖고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 조사와 또 해양심판원의 조사 그리고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통해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선체에 대한 조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선체 인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진상 규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책임 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듣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국회에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고 스태프를 통해서……

○**송영길 의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스태프를 통해서 문광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송영길 의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된……

○**국무총리 황교안**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 줄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께서는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 장관을 통괄 지휘·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부처가 말한 대로만 그대로 믿으면 그게 통괄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보고가 의심할 만한,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부처를 통해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그래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영길 의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관련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로서는……

○**송영길 의원**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체부의 보고로서는 ‘다른 의혹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법조인이시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 상식적으로 의심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2015년 9월경에

제시했던 대통령 청년희망펀드가 68억이 모금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련된 이 미르재단이 어떻게 486억이 모금됩니까?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이걸 보면?

○**국무총리 황교안** 모금이 된 것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재단도 제가 알기로는 1400억 이상이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의혹을 가질 수는 없지요.

○**송영길 의원** 그렇게 검찰 생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 따라 수사하면서 검사 생활 해 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한진해운, 대한항공에서 10억을 미르에 기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모릅니까?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계속 국회에 와 있었습니까.

○**송영길 의원** 보고를 받아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국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늦게 보고를 받고 국정을 어떻게 대응해요,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돼도……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국회가 3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큰소리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송영길 의원** 총리!

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의혹적인 것을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아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하나도 파악도 안 하고.

(「정책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많은 시간이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래서 위급재난문자도 늦게 발송하고 모든 게 이렇게 늦습니까, 골든타임도 놓치고 세월호도 침몰할 때까지 다 보고도 못 받고?

○**국무총리 황교안** 한 말씀씩, 한 말씀씩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다음 화면 보여 보세요.

이 관계자들이 말이지요, A그룹 SK하이닉스 본부장, 롯데면세점 부대표가 참가했어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있고 김형수 미르재단 대표가 참가한 미르재단 축하행사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2015년 11월 달에 결정되는 면세점 관련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68억, 28억씩 냈어요. 그게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미르 또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는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총리는 항상 누가 정리한 것, 무슨 밤 깎아 놓듯이 그런 발언만 해 가지고는 민심을 알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국회의원으로서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을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영의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내시 환관들이 왕의 귀를 가로막을 때 제대로 된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지 그렇게 똑같이 비서실 같은 발언하면 되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면세점의 결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하는 기업들이 68억, 28억씩을 낸 게 이상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다 검증하는……

○**송영길 의원** 아니, 그것이 관련된 의혹이 최

순실 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게 되었고……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 기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부의 경위가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무슨 변호사 같은 발언을 하고 계세요, 검찰만 하시던 분이.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어느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송영길 의원** 다음.

됐어요,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보세요.

제가 만나 봤어요, 제보자들. ‘면세점 사업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누가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냈겠어요. 대한항공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습니다. 한진해운까지 떠맡아 가지고 지금 끄끙대고 있고 S-OIL 주식을 2조 이상 팔아 가지고 한진해운 살려 보려고 발버둥친 대한항공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10억이라는 기부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이런 외압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까?

○**송영길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 의심의 소지가 없습니까? 소지가 생기지요, 의심의 소지가?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송영길 의원** 아니, 의심의 소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서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 스포츠재단 본부 사무실을 찾아봤더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자택 근방과 최순실 씨 관련자들의 자택 근방인 논현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그게 주택가에…… 논현동, 청담동이 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아주,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이 건물을 뒀어요.



이 두 법인의 목적이 체육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대외에,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이런 법인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지금 아예 간판도 뺐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송영길 의원 이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이야기 보고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이것을 못 듣는 게 자랑입니까? 도대체 왜 총리가 이 중요한, 모든 신문에서 1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조사를 안 해 왔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을 못 듣는 것이 사람이냐’고 물으셨습니까?

○송영길 의원 아니, 왜…… 자랑이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자랑이냐고요?

○송영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그것을 확인도 못 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된 것은 있지만, 제가 사실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지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 아니, 총리가 전화하면 사실이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럴 성의도 없습니까, 국민 앞에 나오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국회의원 300명 우리도 전화를 해서 바로……

아니, 언론에 나왔잖아요? 회의록을 위조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대표이사도 없는데 도장을 찍어서 내 가지고 하루 만에 문광부가 법인 허가를 내 줬다는 게,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1차, 하루에 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 준 전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나……

○송영길 의원 들어 보세요, 총리.

총리!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발언하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 이게 기름장어 아닙니까! 무슨 기름장어……

○국무총리 황교안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송영길 의원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저한테 논쟁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입니까?

(「정책질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사실에 기초해서 질문하세요.

○송영길 의원 아니, 사실에 기초해서……

이 재단의 허가를 받게 한 회의록이 위조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회의록을 위조해서 재단법인 등기를 할 때 했다는 것 보고받으셨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사실이 없다고요? 사실이면…… 아니, 그것을 확인도 안 했다면서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사실이라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이라면?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송영길 의원 재단 관계자가.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위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됩시다마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총리가 이렇게 누장을 부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아니, 보도가 나왔으니까 보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된 부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총리를 하면 잘하는 것 같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논의 하도록 하고 경제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원칙에 입각했다, 대통령께서는 대주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이 정권이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한테 돈을 뜯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대우조선에서는 대우조선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 운창중 이런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보내 가지고 돈을 받아먹게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을 뿐입니다.

○**송영길 의원** 영향력을 행사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법 조치가 될 겁니다.

○**송영길 의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 수사한 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사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한진해운 사태, 총리께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송영길 의원** 한진해운 물류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장관이 총괄팀장이 되어서 부처들……

○**송영길 의원** 대통령에게는 누가 보고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부처들과 함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대통령에게는 누가 보고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하면 기재부장관이 보고하실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직접 보고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는……

○**송영길 의원**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송영길 의원** 상임위 때 질문을 해 보니까 유일호 장관께서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했으면 했을 것이고 보고 단계가 아니었으면……

○**송영길 의원** 필요하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물류대란 사태가 긴급한 경제사안인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재부장관께……

○**송영길 의원** 총리가 안 하셨냐고요, 대통령한테?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 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한테…… 총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앉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총괄팀장이 처리해 왔던 문제이고 저도 그 총괄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명도 안 받고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일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송영길 의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

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보고채널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총리가……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 중요한 물류대란 사안을 총리가 보고도 않고 대통령과 상의도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계된 스태프들을……

○송영길 의원 회의도 한 번 안 열었지요, 총리 주재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기재부장관이 총괄해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있고 또 제가 지휘하는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한 때마다 참여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명도 안 받고 결정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매사를 대통령께 제가 지시를……

○송영길 의원 매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진해운 문제가!

○국무총리 황교안 매사를……

○송영길 의원 모든 기업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예요. 이게 그냥 일상사입니까, 이 물류대란 사태가?

(「왜 소리를 질러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영길 의원 말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시스템이 지금, 기재부장관이 나와 계십니까라는 기재부장관이 관계 장관들을 총괄해서 지금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님!

총리님,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일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매주 수요일 날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

아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대통령의 결단이 없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한진해운 이거 방치할 겁니까, 이대로?

○국무총리 황교안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는 맨날 관심사, 북한에 대한 문제, 공안검사답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 챙기고,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들어가세요.

부총리 나와 보세요.

경제부총리, 나와 보세요.

부총리, 어제 다행히 대한항공이, 500억 이사회 결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600억.

○송영길 의원 이거 대통령한테 상황 보고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후?

○송영길 의원 이 상황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당연히 보고가……

○송영길 의원 누구를 통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경제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총리가 안종범 수석한테 말해서 보고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경제수석한테……

○송영길 의원 아니,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독대가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을……

○송영길 의원 문고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송영길 의원 문고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제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꼭 문고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송영길 의원 아니,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송영길 의원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화주들이 전 세계 86개국에, 지금 파나마운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가 멈춰 있어요. 오늘도 한 화주를 만나고 왔는데 속이 답니다. 재고도 없어요. 추가 손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같이 상의도 안 하면 도대체 이 국가를 누가 끌고 가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화주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은 저희도 들어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악……

○송영길 의원 아니, 대통령이 여왕 폐하도 아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대통령과 국정을 상의해야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대통령과 상의하는 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송영길 의원 아니, 직접 부총리가 만나 가지고 해수부장관하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 미사일 쏠 때만 대책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회의도 있고—경제관계장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저도 일일 보고도 받고 일일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중소 화주들께서 직접 피해를 보고 계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의원 올해 4월의 보고서를 보니까 법정관리로 들어갔을 때 이런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해 봤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이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

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 이렇게 될 예상이 되는데 돈 1000억, 돈 500억 그것을 처리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물류대란을 일으켰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에 채권자들이 더 이상의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단순히 1000억, 500억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채권단과 오너 사이에는 약 60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6000억을 만약에 채권단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마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마음이 아픡니다. 사실 이 물류기업은, 이 컨테이너항은 정기항이기 때문에 피의 혈류와 같아요. 한번 끊어지면 복원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실제로. 모든 수출을, 90% 이상 선박 운송에 모두 와 있는 수출 경제 대국이 국적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복원이 돼요? 이것을 현대상선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우조선 4조 2000억을 내는 서별관회의가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문제도, 서별관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좀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제현안회의를 저희가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중소 화주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나라 제1의 국적 선사였던,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이 저렇게 된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6000억 정도의 지원을 채권단이 한다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것이……

○송영길 의원 부총리, 해운산업은 조선산업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해운이 무너지면 조선도 무너져요.

대우조선이 1만 8000TEU급 20척을 머스크가 발주해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과거에……

○송영길 의원 그것을 80% 정도 우리 엑심뱅크(Eximbank)가 금융 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선박금융으로 지원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선박금

용……

○**송영길 의원** 우리나라 은행이 80% 금융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20척 1만 8000TEU 급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머스크가 그 배로 운임단가 인하 경쟁을 거쳐서 우리 국적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이런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어요? 정말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머스크가 그 배를 해 갔습니다. 그 가격은 물론 당연히 머스크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진해운이라는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제1의 해운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4조 2000억…… 1조만 투입해도 됩니다. 조선산업은 벌써 5개입니다, 미포, 삼호까지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4조 2000억보다 훨씬 시급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네트워크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요. 선박편드를 만들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등에 1만 3000TEU급 한 20척을 발주시켜 가지고 새롭게 해운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도 살리고 해운도 살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단계에서 선박편드를 그렇게 조성할 수 있을지 해서……

○**송영길 의원** 4조 2000억…… 2조밖에 안 돼요. 2조만 조성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시 살아나면 공적자금 회수하듯이 전부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는 책임을 물어 자본을 감자시키고, KDB 채권들을 출자전환해서 이것을 살려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법원 제가 아는 판사와 통화를 해 봤는데,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판사 3명한테 이 국가적인 문제를 맡겨 놓은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판사가 해운산업의 전문가입니까? 청산가치, 존속가치만 판단해서 파산 결정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한심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말씀을……

○**송영길 의원**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물자 조달하겠습니까, 그렇게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가. 전쟁이 발생하면 전부 전략물자 수송선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진해운이요. 식량도 우리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해운이 다 없어진다면? 중국 배가 안 태워 주면, 머스크가 안 태워 주면, 공간이 없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화물을 선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안보상……

○**송영길 의원** 90% 이상 우리가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배가 98%를 운송합니다. 비행기로 얼마나 운송할 수가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그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진이나 현대가 다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상시에 다 일시에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물론 그에 필요한, 저희가 국적 선사로 안 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저희인들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송영길 의원** 아니,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을 그렇게 투입했습니까? 이것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결단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보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붕괴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새누리당이 비판했지만 이것은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경제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무경험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결코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보고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계속 청와대 쪽에다 보고와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일로 즉시즉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또 매일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책임제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무책임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여왕 폐하를 놔두고 총리와 장관들이 행정을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결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심은 왜곡되어 있고, 총리는 검사 생활에 다듬어진 것처럼 다 만들어 준 수사서류 보듯이 이 현실과 괴리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비서실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입니다.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장관 여러분!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농사 대풍을 맞아도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양식업을 하는 우리 어민들이 매번 반복되는 적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유례없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분노한 국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누진제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어렵게 사는 국민을 보듬고 안고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며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최근 쌀값 대폭락 말씀 총리님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쌀값이 많이 내려가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영일 의원 쌀 재고 넘친다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재고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수입용 쌀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통상법 체계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부득이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FAO, 즉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적정 재고량이 80만t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지금 현재 7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175만t입니다. 권장량보다 두 배 이상입니다.

총리님,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아시지요, 애물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문제가 있으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고는 쌓여만 가는데 쌀은 수입해야 되고 여태껏 그러한 정책 끌고 온 정부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농정을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쌀의 소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인이 취식하는 쌀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쌀 기술이 향상되어 감으로써 생산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쌀이 아닌 다른 업, 다른 작물을 좀 재배하시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면서 또 농지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이 피해가 생기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제도 당·정·청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자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쌀값 현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산지 기준 80kg당 쌀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4만 원대 아닌가……

○**윤영일 의원** 80kg입니다, 80kg.

○**국무총리 황교안** 20kg이 4만 원이니까……

○**윤영일 의원** 80kg 그 규모를 아실 텐데요. 그게 14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작년도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보다는 15%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16만 원대였거든요. 사상 초유의 쌀값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은 많아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쌀 재고도 많아지고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풍년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날 쌀 수확기 대책 방향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윤영일 의원**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기상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급락은 없을 거다,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에 일정 수준 보전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런데 쌀은 풍년이지만 농민들은 시름…… 아시잖아요. 걱정,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야말로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무사태평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실 것이고 또 정부 정책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풍년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얼마만큼 쌀이 수확될 것인지 하는 것이 아마 10월 달이면 나올 텐데 그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지난 9월 9일 장관이 긴급하게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회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일 의원**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다. 선제적으로 수확기 대책을 갖춰야 된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선제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윤영일 의원** 그리고 예상 수확량 시기가 10월인데, 조사 시기가. 그것을 마냥 늦출 게 아니고 전국 수매계획 또 예상 수확량 조사 시기 9월로 앞당겨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도 인정이 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작황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토대하에서, 물론 예측 정책도 가능합니다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은 확실한 통계가 나온 뒤에 면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고는 쌓이는데 재고물량 보관비용만도, 직간접 비용이 레인지가 있습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면 2000억에서 7000억 레인지로 보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쌀은 수입해야 되고, 재고미는 쌓여만 가는 것이지요.

또 쌀값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2만 원대 이상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쌀 소비가 다양하게, 꼭 주식용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같습니다마는 쌀을 사료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쌀을 사료로 쓰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처를 넓혀 가서 결과적으로 생산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제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공공비축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윤영일 의원** 비축 시기 당겨야만 쌀값 하락 막을 수 있고요. 비축물량 전년도 생산량의 10% 수준, 적어도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RPC가 구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 경우도 작년 소매물량이 165만이었었는데 적어도 10% 수준 정도는 더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구곡 쌀 사료화 정책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 부분 확대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지금 국제식량원조협약, FAC라고 그러합니다. 가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쌀 소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쌀 문제에 관해서는 공급과 또 소비 양쪽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일본의 경우는요, 68년도에 FAC에 가입을 해서 쌀을 해외에 무상 공여를 하고 원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쌓아 놓고 재고 비용만 들어가면서 소진할 대책을 찾고 있지 못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이게 기초생계급여자나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도 정부 쌀을 할인해서 팔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의 노인정, 경로당 가 보시고요, 마을회관 가 보십시오. 여름이면, 겨울이면 다 모여서 공동생활하시고 먹고

주무십니다. 그런 데에 쌀 좀 제공하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를 할인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윤영일 의원** 할인이 아니라요, 할인이 아니라……

**○국무총리 황교안** 공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많이 진척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안보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분리해서 북한에 광물자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한에 광물자원 많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쪽보다 많이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 물물교환하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는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대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영일 의원** 어찌 됐든 우리가 쌀 재고만 가지고 또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전향적으로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대안들이 어떤 것인가 정부로서는 적극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쌀값과 관련해서는, 쌀소득직불제 아시지요?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한 직불제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직불제, 말씀 그대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농민소득·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 직불금제가 마치 쌀값 하락의 원인인 양 생각하면서 뜯어고치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즉 정부 측에서는 마치 직불금이 쌀값 하락의 원인인 것처럼, 수입쌀이 재고미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논리로 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를 못 한다, 즉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쌀값 하락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정책들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농수산물, 무·배추 이런 데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대파의 경우 농진청이 책정한 생산비가 7836원입니다. 3.3㎡당이요. 그런데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최저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382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최저가격보장제로서 다루고 있는 품목이 7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 7개 품목 중에 생산비를 커버할 수 있는 품목 단 한 품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경우는 생산하는 대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른 복지정책 재원 필요하고 말은 한다고 우리가 많이 떠들어 대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똑같이 농민들에 대해서도, 어민들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정책…… 복지 차원에서 소득보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이 정한 내용들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에 최저한도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저한의 기준일 것이고 그 이상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더더구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결하겠다 하니까 중앙정부에서요, 지방교부금을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겁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농산물 최저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해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해 양식수산업에 대한 피해 엄청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중에는 적조 피해도 심대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데 비해서는 적조 피해는 덜했으나 완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합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윤영일 의원** 적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영일 의원** 관련 법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재난 및 안전대책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데 적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윤영일 의원** 유추된 원인들이…… 그러니까 부양물도 있고요, 육상에서 유입되는 COD, 하수·폐수,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뭐 고온과……

○**윤영일 의원**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보상대책도 정확하게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난 2009년부터 영양염류 등과,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번식하고 있는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인 코클로디늄인데 이것과 인과관계 등을 계속 시계열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온이랄지 조류의 흐름이랄지 영양염류랄지 햇빛이랄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제가 지금 언급드린 적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원인 규명 작업들, 조사 작업들 해 왔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2009년부터 아주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완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코클로디늄이

아니라 카레니아라는 새로운 플랑크톤, 좀 희귀 성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영일 의원** 그런데 복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영일 의원** 복구비 계속 줄어들었지요, 정부 측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과 정부의 입장은 이런 재해의 경우에 재해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을 통한 이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본적인 미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영일 의원** 재해보험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즉 재해보험률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아주 어종과 다 다릅니다마는 대개 20% 미만 수준이나 다만 정부는 주로 발생하는 재해 취약 업종 약 10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대개 57~58%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윤영일 의원** 지금 가장 높은, 올해까지 한 35%까지가 정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전에 10%, 20%대였습니다.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당연히 높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윤영일 의원** 그런데 왜 안 높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이 보험이 국고가 50%이고 지방비 30%, 자담이 한 20% 됩니다마는 자주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으나 그에 대해서 역시 조금 찾아들면 또 보험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20%, 국고보조가 50%이거든요. 부담이 커서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국가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국가 부담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런 것 때문에……

○**윤영일 의원** 그리고 특약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특약이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니까 고수온이나 이런 데서 재해보험을 뭐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 가입률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특약의 경우에는 정말 아주 낮은 상황이나 지자체마다, 특히 천수만의 서산 같은 경우는 아주 고수온 특약을 많이 가입을 한 반면에 그 인접 시군은 아주 적고, 남해안 같은 경우는 고수온 특약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원체 희귀하다 보니까 아주 거의 가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윤영일 의원** 1.5%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영일 의원** 제도개선책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수온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주계약으로 바꾸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한 1.5배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특약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하게 되면 대개 20%대에서 70%대까지 이렇게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 부분에 대해서 주계약으로 가는 방안 또는 전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바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재해보험들이 다 소멸성 보험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소멸성이지요.

○**윤영일 의원** 그것을 보장성 보험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윤영일 의원** 저축성 보험으로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 농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금년에 이제 버에 대해서 일부 저축성 환급으로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윤영일 의원** 들어가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님.

겪으셨지요,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영일 의원**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영일 의원** 어제 그제 신문에 8월분 고지서 받았더니 전국의 300만 가구가 그것 때문에 2배 이상의 전기요금 폭탄 맞았다고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당정 TF를 구성해서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가지고 용도별 요금제의 적정성, 형평성에 대해서 개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처음에 저희들이, 7월 29일 날 저와 국민의당이 '전기요금 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발표하게 되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께 개편을 건의하자 정부 측에서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정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개편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당정 TF 일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늦어도 연말까지 개편을 하도록 하고요.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하고 지자체가 경로당 난방비 지급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영일 의원**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여름철……

○**윤영일 의원** 난방비요, 난방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 난방비……

난방비는 겨울에 시작……

○**윤영일 의원**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3월까지입니다.

○**윤영일 의원** 그러면 폭탄 안 맞게요, 또 폭탄 안 맞게 11월 이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경로당은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경로당, 노인당,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다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정용입니다. 이해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진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누진제 자체뿐만 아니라 누진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보고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한전이 2015년도에 전기요금으로 얼마만큼 영업이익을 가졌는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의원**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영업이익, 2015년 물어보시는 거지요?

○**윤영일 의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영업이익이 2015년은 한전 자체는 4조 4000억 정도가 되고요.

○**윤영일 의원** 한전이 11조 346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 그것은 연결 기준으로 발전 자회사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겁니다.

○**윤영일 의원** 작년에 정부 지분으로서,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데요, 배당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부 쪽에 작년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한전 부지 매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배당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요금개편 흡수 여력도 같이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 지분으로 배당한 배당금이 약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챙기고 또 정부 배당이익으로 챙기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까 한전 부지 매각이라든가 유가 등 연료비가 떨어져서 이익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 부분 보시면 계속 손실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09년부터 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 2012년까지 계속 손실이 누적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일 의원** 정부 나름대로 일정도 있고 하겠습니까만 11월 이전까지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어야 될 당위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당정 TF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하고 늦어도 한 12월까지는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마찰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국민들은 볼 것입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개편하겠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할 겁니다.

○**윤영일 의원** 다시 옮겨올에도 폭탄 안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영일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장관 여러분!

우리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의 땀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정부의 농업 가격정책과 소득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농업재해보험정책입니다.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온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편을 거쳐야 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부 여당 정책공약집 281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가계부채 완화 등 많은 약속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농어민과 서민과 한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정부와 여당과 국회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윤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석에 만난 많은 농축수산인, 자영업자들께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법의 도입 취지가 국가를 청렴사회, 도덕사회로 바꿔 보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렴사회로 가야 하고 또 저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이 넘어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법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수경제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황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대선의 트럼프 열풍에서 드러나듯이 세계가 반개방정책, 보호무역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으로 내수마저 침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년 11조 6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1조 원이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렵게 마련한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즉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을 제정한 국회의 무책임은 더 심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모든 법과 제도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시행령 기준을 상향해서 좀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의견 조율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준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이 계신 사항인 것

또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입법 목적 또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령안 가액기준의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흠 의원**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가액기준을 3, 5,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려를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거기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결론을 냈는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 가액기준 등에 대해서 법 시행 이후에 집행성과 분석과 또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2018년 말까지 다시 분석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이게 농축산업 이쪽뿐만이 아니라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야의 종사자들, 그런 분야까지 영향이 미치고 또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체 소속 홍보영양사와 학교 소속 영양사 간 대면접촉이 금지되면서 홍보영양사 10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 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회사의 그런 사보를 발행하는 직원도 언론인에 해당돼 가지고 대기업들, 기업들이 사보를 폐간하면서 인쇄업체 이쪽의 일감이 지금 끊기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내수 불황의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내수를 또 지탱하는 기간산업들이 위축되고 이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런 예측들도 많은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 방향은 이 법이 9월 28일 날 시행이 되게 돼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그 내용들이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많은,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고 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법 시행 과정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이 법 시행으로 해서 승진 경쟁이 치열한 그런 군이나 경찰 이쪽 등에서는 경쟁자를 음해하는 투서 등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지적 또 서울·세종 등에는 법 위반자들을 잡기 위해서 일명 란파라치 학원까지 성행한다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가 익명으로 신고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접수를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지 말만 가지고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제한하는, 아까 말씀하시는 란파라치에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그러면 이 문제, 이 법에 대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 정부의 입법으로 이 법안 발의를 할 용의 있습니까, 개정안?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규개위에서는 2018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 축적이 되면 그런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저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김영란

법을 먼저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까지 이 법에 대한, 현행대로 하고 기타 공직자라든가 언론인 등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이든지 늦추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법안 발의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 그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법 취지를 종합해서 법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 제기로 보입니다마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이 설립을 주도했다’, 또 ‘청와대 참모가 모금에 관여했다’ 등 제가 보기에는 괴담 수준의 설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보니까 전경련이 직접 나서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해명까지 했는데도 야당에서는 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무책임하게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 가고 있거든요.

총리님,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기업에 대해 얼마씩 내라고 모금을 강요했다는데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기업이 응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가 왜곡되거나 과장돼 가지고 퍼지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실련이 필요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조직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번 건도 본 의원은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희 문건, 십상시 의혹 등 실체도 없는 허위 의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근거 없는 이 의혹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제가 조금 전에 경실련 얘기를 했는데 경실련이 아니라 전경련에서 모금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단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물론 그건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견된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농축산물의 판매 감소가 이번 추석에 이미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산하 5개 유통사에서 10만 원 이상 고가 농축산물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우 13%, 과일은 5%, 인삼은 8% 감소했습니다. 농축수산인들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한 것이 무리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축수산인들이 노력해 온 농축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그리고 고부가가치화, 한식문화 세계화도 무산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고급화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조금, 그것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급화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김태흠 의원**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부총리님 안 먹는데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요, 국내인들도 안 먹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걱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접대문화가 좀 바뀌…… 그래서 제가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접대문화도 바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흠 의원** 그러면 3만 원 이하짜리 가지고 어떻게 고급화가 돼요, 지금 현 시세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김태흠 의원** 저는, 부총리님 너무 안일합니다.

부총리님, 식사비 3만 원이 기준가가 되면서 고기, 소주, 식사 이렇게 해서 저녁식사를, 2만 9000원짜리를 어느 식당에서 김영란 세트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기는 수입산이 되더라

는 말이,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얘  
기 들어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면서 어떻게 고급화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먹는  
식사는 되겠지만.

결국 김영란법은 가격이 싼 외국산 농산물 소  
비 장려법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걸.

그리고 부총리님,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  
들입니다. 한국경제원 보고서에서 예측한 경제  
손실 11조 6000억 원 중 8조 5000억 원이 음식업  
이쪽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추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한정식당  
등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고 수만 명의 종  
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하  
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태흠 의원 상반기 기준 1250조에 이르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그쪽하  
고 별개로, 자영업자 대출이 따로 되겠습니다마  
는 자영업자가 지금……

○김태흠 의원 별개로 어떻게 가요? 거기에 포  
함돼 있고 함께 돼 있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1250조에는 사실은 가계대출이  
라고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이 자영업에 소용되  
는 부분이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따로 한 290  
조 정도, 그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조금씩은 틀리지만 올 1월 달 하  
나금융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520조예요. 좀 틀릴 수도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양쪽으로  
하면……

○김태흠 의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영업자들 부채가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인 건 맞지요,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  
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태흠 의원 지난 1년간 증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개인사업자로  
흔히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273조이고 약 290조  
로 현재 6개월 동안에 그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게 지금 추정을 해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2월에도 이미 520조가, 가계대출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한, 그것도 그 비슷한 규모  
가 돼서 520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태흠 의원 증가한 것은 맞잖습니까, 그렇지  
요, 지난 1년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증가율이  
높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태흠 의원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람  
들이냐 하면 은퇴를 한 50대·60대들이 지금 자  
영업자로 많이 뛰어 드는데 1억~2억 자기 돈 가  
지고 있는 데에다가 은행에서 1억~2억 정도 빌  
려서 식당이나 뭐나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요식  
업이나 이런 분들 다 망가지면 이것 집단 부실화  
될 경우 있잖습니까? 집단 부실화가 뻔하잖아요?  
이랬을 때 악성 가계부채 증가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면  
서…… 지금 이것이 볼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가계부  
채 대책은 여러 형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관리  
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

○김태흠 의원 아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  
답을 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저희가 그렇지 않아  
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  
려고 했던 것이 이 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쪽은 오히려 조금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국수를  
한다든가 이런 집은 오히려 그렇게 직접적인 타  
격이 없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  
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저하고는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

는데요. 결국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 기득권층 부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기득권층, 공직자보다는 서민들의 삶만 고달프게 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것은 서민고통법이 될 거예요.

부총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열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야당이 여름 내내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이 서별관 청문회 열자고 했는데 야당 주장대로 뭐 밝혀진 것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김태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밝혀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 주장 말대로 밝혀진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김태흠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원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자신 있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하여튼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고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별관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으려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위해서 노조 동의서도 좀 받아 와라, 그리고 또 관련 책임자 엄중문책 등 이런 선결 과제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거기서 지원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보류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서별관회의라는 것이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회의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지원 결정은 그 이후에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김태흠 의원 산업은행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별관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자금 지원이 되려고 하면 아마 노조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서로 간에 협의를……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한 것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부분은 그 반대로 저희가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그랬으니까, 자금 지원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상임위에서 흥 전 회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사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뭐 국회에서 결정하신……

○김태흠 의원 제가 오늘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특정인을 흠집 내고 정치공세를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는 이 구태정치 사라져야 돼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특정인을 하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뭐 특정인……

○김태흠 의원 아니,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이나 책임 있는 결정 하려고 하겠어요? 이러한 야당 행태 때문에 이번 한진해운 같은 중대한 사안, 이것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한진해운 사태 키운 것 아니에요?

밖에서 보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장관들이 이 문제를 키웠다, 주저주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니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희도 한진해운이 그야말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같이 이렇게 된 것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는 다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별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장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이지만 소신 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소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쌀값이 작년 동기 대비 15% 이상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또 쌀 작황도 좋고 그래서 가을 수확기에 농민들께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름이 깊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회의에서 남은 물량 시장 격리하기로 했는데 얼마 격리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구체적으로 격리 물량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거 생산 추세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총수요량 대비해서 현재 공급이 초과되는 것이 30만~35만t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격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약 6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물량이라든지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상 수확량이 10월 중순에 나오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추가되는 물량 전부 격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격리할 때 그 방법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이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1ha 정도의 소농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12월이 되기 전에 쌀을 팔아 가지고 영농자금 상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대농만 혜택을 보고 소농 같은 면 혜택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적극적인 검토해서 한 번에 전량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작년에 34만t을 했는데 나눠서 하니까 효과가……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 하면 지금 아직 예측이지만 전량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은 그 정도 초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정 부담도 많고 격리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이 쌀 수급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연례행사예요. 그래서 과잉물량에 대해서 매년 격리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이 근본 대책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김태흠 의원 그래서 재배면적을 얼마 정도 감축해야 공급과 수요가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금년도의 재배면적이 77만 9000ha입니다. 그래서 2018년 수급 균형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약 6만 8000ha 정도가 감소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초과물량 35만t을 줄여 나가는 데 약 7만ha가 필요한데 그 정도 감소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현재 조직화하는 문제, 생산 조정 3만ha 하는 데 300억 가까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적정 면적이 줄어들면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 그 시점 물량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변동직불금제라든가 고정직불금…… 이게 또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 얘기만 자꾸 하시면 계획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변동직불금제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 현실하고 안 맞아요. 지급기준단가인 생산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기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현재 10ha 당 504kg으로 지급기준단가를 만들었는데 실제 생산량은 508kg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김태흠 의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해서 농가에게 소득보전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일관성 문제라든지 예측 가능성 문제 등도 있는데 일단 2013년부터 현재 기준을 ha당 63가마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쌀직불금 이것은 쌀값과 연계해서 지급되는 제도인데 현재 풍년 작황으로 볼 때 쌀값 하락은 볼 보듯 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올해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농림식품부장관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못 하는 게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기재부가 틀어쥐고 있으니까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예산이……

○김태흠 의원 그래서 부총리님을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과잉물량 전량 이것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올해 나온 것을 가지고 결론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예산 부담이 수반이 될지를 잘 검토를 해서……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시키면 직불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 손실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쌀값을 안정시키면 직불금이 적게 들어가고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목표가격까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차이

를 어떻게 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일대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흠 의원 제가 볼 때는요, 30만t 격리 시 2490억 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2300억 원가량 절감돼요. 그러면 190억 정도가 상쇄되는데 이것은 쌀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잘 따져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지.

○김태흠 의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급·수요에 맞춰서 재배면적을 줄여야 앞으로 연례행사가 없어지는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생산조정제 이 부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기재부에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해 줘야지요, 구조를 바꾸려면.

아니, 지금 농민도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인데 대우조선이, 다른 산업은행은 말이야 공적자금 수조 원씩 집어넣으면서 왜 구조조정을…… 농가도 구조조정을 해 줘야지, 농촌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생산조정제라든가 어제 발표도 됐습니다마는 농지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래서 이게 쌀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여간 동일한 예산 투입하고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은 한 면만을 보고 시행하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명분과 찬성 여론에 밀려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자영업자에게는 서민 고통법, 농축수산인에게는 외국산 농산물 소비 장려법이 될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비난 여론이 SNS상에서든지 쇄도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줄 알면서 모른 채하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개정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뻥하고 다시 시스템을 바꾸려면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일찍 고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영관법을 4급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먼저 시행해 청렴사회의 시발점으로 삼고 기타 공직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춰 부작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감하시는 여야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김태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초과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바로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사흘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박광온 의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한 보도와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정당하지 않은 대목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만 봐 가지고는 정당, 부당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광온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명백하게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서 위법, 불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검찰의 조사가 있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의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 확인은 어떤 수단을 거치든지 있을 수 있지요.

보도된 것과 그 당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명백하게 위조된 문서로 재단의 법인 자격을 허가받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닙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박광온 의원**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 외에는 제가 증거로 판단한 그런 결과를 보고 듣질 못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오전에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 '회의록이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2016년 1월 15일 12시에 전경련에서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임원 선임 결의 총회가 있습니다, 회의록. 그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모르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회의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임시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그 당사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회의록이 문

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명백한 위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금방 확인이 될 것들을 그렇게 영성하게 위조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 희극성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희극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확인을 명백하게 해 보십시오. 이것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시 그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 정 모라는 분은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의 확인, 특별히 공적인 측면에서의 사실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증거 판단과 그것에 따른 결론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좋습니다.

자, 이 사실만으로도 첫 단추부터 이렇게 불법한 행위가 있어서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로 법인 자격을 받았고 또 그 법인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았고, 사실상 그 정관에 규정된 사업은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어떻게 위배되는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한번 죽 정리를 해 봤더니 민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형법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무집행방해…… 거짓된 문서로 국가기관을 기만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적어도 이 정도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와 증거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의 검토를 거쳐서 부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면 이게 부적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렇다면’이 아니고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관련 부처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것을 지시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지시는 아니지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는 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된 단계입니다. 지금 보도된 것 외에 제가 확인한, 이런 판단할 자료들은 전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미 정부 부처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돈을 해당기업에 돌려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문체부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보도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검토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명백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을 누가 합니까?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조속하게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절차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확인의 주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 감사 또는 직무확인,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난 자료들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또 증거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부처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해야지요, 신속보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박광온 의원 신속하게는 안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속하게 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신속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총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를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이 두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과정 모두에 권력 개입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점, 모금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800억 원 되는 돈이 모아진 점 그리고 청와대 핵심인사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일각의 증언, 이를 종합하면 총리의 어법대로 하면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분명하게 권력 개입의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단 설립이 빨리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해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런 법인 설립허가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모금이 단기간 내에 많이 됐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불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적법하게 잘된 거냐 따져 봐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쉽게 이것이 불법이다, 잘못됐다, 뭐가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난 4건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그것은 통합법인 때문이고,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그 밖에 두 건이 있는데요. 평균 3주, 길게는 20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인사가 관여했다는 증언은, 이것도 역시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중범 수석을 내사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것도 확인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청와대 핵심인사가 이런

문제에 구체적으로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는 확인을 해야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 보도나 의혹의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 보고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들을 종합 판단하는 것이 보도가 있다고 해서 어느 기관이 바로 움직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두고 공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금방 밝혀질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건은 어이없고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판단 자체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희극적인 요소와 함께 비극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저희들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1980년대 일해재단의 모금 방법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5공 청문회,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께서 나오셔서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런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온 의원** 당시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언급하셨느냐 하면요,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일해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는데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36년 전으로 우리 역사를 되돌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비정상인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권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 과정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

느냐 여하에 따라서 정권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듣기로는 전경련에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지금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무부처가 문체부니까 전경련에서 문체부에 사전에 즉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신청을 했고, 다 미리 확인됐고 절차가 밟아진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재단 설립허가를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연 비리라고 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이 확인된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게 방어의 입장에서만 말씀하고 또 그 방어의 입장을 견지하시기보다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박광온 의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진실이 뭐냐, 그 부분을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의원** 그래서 사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무대책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와중에 있었습시다만 대통령 주변에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문은 없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자신감마저 잃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도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명백한 증거 관계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고맙습시다.

○**박광온 의원** 예, 저도 그렇게 할 텐데요 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시다. 모든 것을 법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답답함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저출산을 해소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구소득은 427만 원입니다.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습시다.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가구소득의 60% 미만일 때는 1.6명인데 가구소득의 60%를 초과한 가구는 1.8명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약 절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출산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자녀수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치는 12살까지 자녀 한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이용을 제한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광온 의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50조 이상을 썼습시다. 효과가 미흡한 수준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출산 문제가 2005년경에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로 제기됐고 그 이후부터,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습시다, 지난 10년 동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재정도 투자했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

런 상황이고 저출산의 현상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정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 이용과 가정 양육에 대한 부담의 선택권을 보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통해서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정책적인 검토들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얘기됐고 각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 국가들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11조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의원 GDP를 몇 %나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당시, 그 이후로 추정 안 했습니다마는 0.2%p, 잘하면 0.3%…… 한 0.2%p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지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의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순환에 매우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그

것을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구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아동수당 규모 15조를 가정해서 경제효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그해 경제성장률의 0.3%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그 액수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지불하게 되면 재정이 또 다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래서 현재 재정지출 규모하고 예산세출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 부분이 효과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다 생활에 스며들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재정 지출의 각 항목이라는 것에는 다 또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아동수당이 순수히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만, 그 목표로 쓰는 것이냐는 좀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아까 총리께서는 다양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아동수당이 그에 대한 어떤 대체를 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저는 부총리의 우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다른 재원을 갖다 아동수당으로 쓰자는 게 아니고 아동수당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세인데요. 연간 550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주게 되면 최대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최대 15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

별소비세 가운데 사치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아동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요, 15조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5조라는 것을 새로이 세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그것 자체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원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박광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했던 그런 분야에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8.5조~9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아마 세수는 더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8.5조~9조라는 것도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신 세원 중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도 저희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좀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금융소득에서 그만큼의 과세 강화가 가능한 것인지? 금융은 특히 이른바 자본 이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고요.

법인세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현재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때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상증세를 그것을 한다 해도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한 6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목의 증가를 해서 6조를 만들어 내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도로라도 과연 6조를 그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저희들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추계를 한 것이니까요, 관련 자료를 제가 부총리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한테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세는 단순히 아동수당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초고소득자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대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가 정말 위태로울 지경인데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취지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안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재정 지출을 하고도 실제로 저출산의 해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반 정도는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양극화와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지진보다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아동수당 도입,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맞추셨어요.

다음은 부산 기장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상직입니다.

지난 추석 때 지역 인사를 다니면서 민심을 들어 보니 정말 경주 지진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은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라 근심이 더욱 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사태, 콜레라 등으로 장사가 안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민생 경제의 문제가 한 가위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국가 경제 혁신을 위해서 국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 정말 잘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대부분이 과제 관리상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G20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혁 또 FTA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장 그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 지금 제2의 벤처 붐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예,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국가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총리님께서 참 동분서주 하는 것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정말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기간 매우 중

요합니다. 경제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GDP의 한 60%,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p 정도 부족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리고 또 1인당 생산성도 거의 정체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또 교육·관광·법률서비스·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됐다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서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또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고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가 자동 폐기가 되고 이제 20대 국회 들어서 재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정이 안 돼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꼭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19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상직 의원**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런데 보건·의료를 제외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나머지 분야에도 중요한 법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까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고용의 효과도 높고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때도 의료·보건 분야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 가장 논의가 치열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부총리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이 돼서 우리나라 의료·건강 보험 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조항들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를 들면 당연지정제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이 법에 의해서 훼손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상직 의원 또 작년 말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전략산업,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산업을 선정할 바 있습니다.

전략산업은 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상직 의원 제가 알기로 지난 5월 달에 정부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출한 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부총리께서 우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우선 지역 주도를 하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또 그래서 이것이 미래 먹거리로 연결되고 확보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자는 민생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각 2개씩, 그래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이미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 맞춤형의 규제 특례 78건을 부여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고…… 그 규제 특례는 말하자면 지방이 그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 특례가 확정이 되면 이와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과 세제를 통한 지원을 해서 그 효과를 높이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윤상직 의원 우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쟁점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가, 19대 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법 관련해서 쟁점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 것은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고쳐서 개선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유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의료영리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정된 바가 있고.

의료영리화라는 것은 이게 표현이 의료영리화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조례로서 정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료의 영리화 내지 의료 공공성의 훼손 같은 문제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다른 시도에서 활용을 한다 하면 부작용은 똑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정부에서도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또 우리 국민들께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부가 더 설득하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타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정부로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직 의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물겠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한진해운은 국내 1위이고 또 세계 7위의 정말 대형 선사입니다. 지금 이게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산항만 하더라도 연간 화물 컨테이너 160만 개가 앞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환적 손실은 연 1100억 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 포함하면 앞으로 연 18억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또 협력업체가 받을 돈 90% 이상은 떼인다.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업은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우리는 수출, 무역으로 이렇게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 사태로 아직 하역도 못 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화물이 약 140억 달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마저도 블랙프라이데이 특수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전전공공할 정도로 국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전략산업이 무너질 위기라면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되었다면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것 안

일한 태도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이것에 결코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태를 당하고 있는 특히 중소 화주라든가, 화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칙은 기업주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자금의 이른바 화물이 제대로 하역이 안 되는 사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이 한진해운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지원 방안이 한진그룹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역튼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채권단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의 하역 중단사태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해결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대체적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가 이렇게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치러야 하는 국민의 세금,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끝에 결국 채권단이 그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해운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주의 문제, 항만·하역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한진해운과 한진그룹과 또 채권단이, 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채권단도 같이…… 또 그것을 위한 조치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관련부처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다음 달 중에 해결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땀가 좀 긴 안목으로 우리 해운산업 국적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꼭 한진해운을 공중 분해시키는 파산, 좀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윤상직 의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은영 전 회장, 4월 말 자율협약 신청 전에 보유주식 67만 주 전량 매각했습니다. 또 2014년도에 한진해운…… 물론 이건 언론보도 사항입니다마는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또 300억짜리 계열사도 넘겨받았고 퇴직금으로 97억 원 받았고, 정말 이런 오너 대가족 일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다 확인을 해 보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이와 같은 큰 회사이고 정말 국가의 국적 선사로서 당당하게 활동을 해 오던 그 한진해운이 이런 부실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다 공적 부담의, 일부는 다 공적 부담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국민 경제에 영향을 초래한 것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엄중히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저도 한때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진해운과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아십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장관 시절에 정말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해 6월 의원 입법으로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나 야당의 재벌 특혜 시비로 올 2월에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8월 시행됐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당초 발의된 법률안과 최종 통과된 법률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큰 차이는 없고요 대기업 악용방지 장치를 마련했다든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같이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을 하고 경영권 승계라든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윤상직 의원** 지금까지 운영 실적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법 시행 이후 오늘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요, 3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신청기업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2개, 중견기업이 1개, 중소기업이 3개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그 분포가 돼 있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관심이 많고요.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기자재,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업종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일대일 상담회 같은 걸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법 내용에 대해, 또 취지에 대해서 보다 홍보를 하고 또 상담도 지속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상직 의원** 결론적으로 이 법이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특혜법은 결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아닙니다. 대기업도 되겠지만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어려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경제 활성화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제 정치권도 정말 ‘묻지 마 반대’만 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법이 있으면 통과에 앞장서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 이어서 정말 전기요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여름…… 장관, 8월 달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올여름 장기간 이상 폭염 때문에, 특히 전기요금 걱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이 크셨던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누진제 개선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이런 비난 하면서 우리가 주춤주춤 한 게 참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적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개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누진제 개선은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전기요금약관만 개정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 확정·발표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정 TF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일정에 따르겠지만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늦어도 연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도 개선할 데가 있지요? 특히 기본요금체계, 제가 장관 할 때 이 부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제기하지 않아서 지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꼭 개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용 요금은 다른 용 요금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배려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용 판매단가가 주택용이라든가 일반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예컨대 주택용이 124원이라면 교육용은 113원 정도고요. 또 2013년에는 기본요금을 8.8% 정도 내렸고, 특히 올해부터는 동절기·하절기 기간 중에는 15% 할인 혜택을 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요금은 사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일반용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의 취지는 사용자가 유발하는 발전 내지 송·변전 시설 비용을 회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만 기본요금을 달리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의 경우에는 최고 사용하는 기간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교육용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당정 TF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살피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상직 의원** 다음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원전의 건설과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급 안정이라든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든가 또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대안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라든가 민원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확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원전은 다른 시설보다 더 높은 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도 원전 내진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원전의 지진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안전과 관련된 핵심 설비인 원자로 내의 제어장치라든가 냉각펌프 같은 부분들은 내진 성능을 현재 리히터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 4월까지 보강을 하고요. 지진 등 극한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18년 말까지 전 원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월성하고 고리 원전은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질, 지진 또 구조물,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외 사례도 같이 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송유관, 가스관 포함해 가지고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내진 성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북한과는 달리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윤상직 의원** 우리 시장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양극화 문제, 이것도 바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경제민주화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에 우리 경제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개입으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헌헌법상에 경제질서는 통제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우리 사주의 사외이사 선출권은 근로자의 경영참가 기회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포함해서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은 경제 환경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안입니다. 쉽게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가 다 아주 굉장히 잘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 충분한 재원이 있고 이런 여건이 잘 갖춰진다면 모르되,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찬반 논란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초과이익공유제도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업 이윤은 협력업체의 기여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의 산정과 협력업체 기여도의 정확한 평가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기업의 이익은 협력업체의 기여 또 원자재 가격 변화, 시장의 경기,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과이익의 산정과 배분 기준, 또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을 명확하게 잘 평가하는 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이익이 얼마 난 것이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과제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범위 설정 등의 과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히려 기업 간에, 대·중소기업 간에 또 여러 경제주체 간에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오늘 또 두 분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 참모가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비선 실세 등을 운운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의혹들이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문체부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했고 또 전경련이 필요에 의해서 이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정부에 와서 지금 3년 7개월 됩니다마는 비선 실세라는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얘기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팎에서 죽 여러 가지 일을 봐도, 비선이 있으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금 모금은 전경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류문화가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금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업 망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누가 내라고 그래서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기업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업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도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산업부장관 출신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순방계기로 체결된 각종 MOU와 협력사업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순방 시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행사, 어떤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비즈니스 상담회, K-POP, 케이푸드(K-Food), 국악 공연, 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범 이런 많은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또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이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 한류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좋은 아이템과 역량이 있으면 해당되는 그런 기관 단체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전적으로 열려서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러면 특혜라는 것도 사실은 억측일 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다 열려 있는데 특정 두 재단만 이렇게 대통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에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중소기업들,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기업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입니다. 그중 현금성 자산은 86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460조 넘는 돈이 투자는 되었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옥죄다 보면 기업들은 해외로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부

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 주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매듭을 시원하게 풀어 줘야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제20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 국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연주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고통 어린 아우성을 들으셨습니까? 개발 독재시대, 압축 성장을 위해 몰아준 각종 인허가 등 특혜와 독과점적 지위, 우리 국민들의 저임금, 수출 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 심지어 망하면 공적자금 투입까지, 그렇게 국민들과 경쟁자의 땀과 눈물을 대가로 커 온 재벌 대기업들은 정치민주화 이후 시장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불공정하게 축적한 경제력을 기득권화한 상태에서 국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니, 전경련이라는 괴물단체를 만들어서 각종 압박과 로비까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기득권을 남용하고 경영 효율화, 경영 혁신이라는 기치하에 광범위한 아웃소싱과 자동화를 통해서 이익의 독점화, 위험과 부담의 사회화를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해야 할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그 임무를 소홀히 한 채 방임하거나 심지어 공조해 왔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조화를 통해서 활력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자산총액 합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입법예고안이 확정되게 되면 규제를 받던 기업이 65개 대기업집단에서 25개 대기업집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규제 완화, 나쁜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규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큼니다.

그동안 국민경제 규모 확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게 규제 대상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7년도에는 지정기준이 400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09년에 이제 5조 원으로 그렇게 10배 이상 확장이 됐는데 이번의 지정기준 상향은 09년도의 시행기준을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기준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그리고 공시의무, 이 두 제도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 규제의 취지가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러면 ‘경제 여건이 변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 우리 대기업 특히 재벌들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별히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자산총액입니다. 자산총액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언주 의원** 환경을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

는데, ‘그 규제의 취지가 이미 다 달성이 어느 정도 되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화하는 겁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도 규제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성장도 같이 고려하는 양자의 균형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언주 의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규제를 더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갑자기 왜 완화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SNS 업체인데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시장 잠식, 미용실, 가사도우미 호출, 주차서비스, 이런 골목상권에 대한 침해 논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정 제도는 대개 5년 단위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구조가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에는……

○**이언주 의원** 일몰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규모가 커져도 그 규제하는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않고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완화합니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조건을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이번 규제 부분은 09년도에 규정된 것을 7년 만에 바꾸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책들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라든지 또 공시의무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5억 이상이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들…… 과거에 대기업 규제를 받던 것이 이제 풀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또 관리하고 규제하고 공정거래에 침해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언주 의원** 이미 침해되고 나면 늦습니다. 다 망하고 피눈물 흘리고 나면 늦습니다. 언제부



터 도대체 제대로 할 겁니까?

정부가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집권을 하고 약속을 파기까지 하더니 이제는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고하셔야 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다른 사안인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드 도입 이후에 중국이 한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와 얘기들이 있어서 정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중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작가나 출연자들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놔서 제작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류 콘텐츠가 정치·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정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한류 콘텐츠의 확장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창조를 융합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계속 앞서서도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독립된 재단입니다. 그리고 설립 시기도 두 달 반이나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회의록, 회의 장소 등이 동일합니다. 목적이 다른 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집기 종류와 가액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신청서를 보면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총리님,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해서 가액까지 다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주체가 만든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그런 내용들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주체라고 거의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정권실세의 외압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앞 전에 질문할 때 ‘어떤 이익이 있어서 기업들이 알아서 내지 않았겠냐? 무슨 외압이 있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적인 이익들이 기업들은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언주 의원 예, 당연합니다. 그냥 공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르재단 설립이 있던 작년 10월 26일 그리고 K스포츠재단 설립이 있던 올해 1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해고, 노동개혁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동개혁안은 그즈음인 2014년 11월 전경련이 정부에 민원으로 제출하고 계속해서 떠들어 댁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 인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부가 노동 개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언주 의원 민원으로도든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재단에 빠르게 모인 비상식적인 모금,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의 대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어떤 일치돼서 딱딱 이렇게 대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대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그런 내용으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정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신중한 판단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 개혁 해 줄래? 기부해 줄 게’ 이런 식의 대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가지고 큰 틀에서 거대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정부만의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더 이상 이

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전경련이라는 존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지만 도 대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뭐 하는 곳입니까? 전국 경제인입니까, 그분들이? 재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대고 로비를 하고 국회에 와서 로비를 하고, 어떤 경제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내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어느 나라에 이런 집단이 있습니까? 경제력 집중도 모자라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우리나라에 큰 경제단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만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체 자체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물증에 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총도 있지요. 그런데 경영자총회하고 이것이 같습니까? 경총이 있으면 뭘 전경련 왜 필요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경제단체가……

○**이언주 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뭐기에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와대를 들락날락할 것 같으면……

○**이언주 의원** 해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에게도 좀 왔어야 되는데 거기 단체에서 저에게 와서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필요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언주 의원** 그분들이 뭐기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요청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언주 의원** 뭘 대표하신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6개 경제단체가 해당되는 지역의 경제인들을……

○**이언주 의원** 그러니까 6개 경제단체들이 있는데 그중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경련—전국

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연합회, 감히 어떻게 대놓고 로비를 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그것을 왜 우리는 들어야 하고, 왜 성명을 발표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 보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연 이제 전경련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로비해도 되는 것인가, 경제력 집중된 단체들이, 경제민주화의 대상들이 대놓고 입장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단체들은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여성 경제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이언주 의원** 그러면 이름을 재벌대기업연합회라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단체들이 그 회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 발전과 또 물론 회원들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고쳐 나가고 또 건의하는 것들은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가 보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전경련 뭐 하는 곳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네끼리 필요한 일을 협의도 하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경제인들이라 함은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회원 수가 600개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조업이 제일 많고, 여러 회사들 해서 600개 사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언주 의원**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런 것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서 기부금 모아서 정치권에 줄 대고 정부에 줄 대고 이런 정경유착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체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썸, 전경련 내부가, 기업들이, 회원사들이 그야말로 해체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언주 의원 지구상 어느 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본이 아마 비슷한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일본의 경단련은 지금 경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노사 협의를 할 때 경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필요합니까, 개발독재시대도 아닌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썸요, 이것이 처음 결성될 때의 의미를 제가 지금 다 잘 기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언주 의원 큰 틀에서 보면 거대한 담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 담합이라고 하면……

○이언주 의원 아, 정의를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미하시는 바를 짐작은 하겠습니까마는 또 실제로 회원사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이려고저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전경련을 어떤 구체적인 특권을 가진 단체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자꾸 대우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정부가 전경련을 무슨 특권을 가진 단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파트너로 대우해 주잖아요. 어느 경제단체가 감히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감 나라 배 나라 합니까? 어느 경제단체가 국회의원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청와대나 이런 데 와서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

○이언주 의원 모든 경제단체가 찾아오면 다 만나 주십니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모여서 뭘 위해서 한나라는 것이 분명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경련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나 이런 회의에 전경련 회장이 참석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언주 의원 굉장히 정체가불명 아닙니까, 사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 어떤 산업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래도 역사가 있고……

○이언주 의원 예, 역사는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개발독재시대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와서 필요합니까, 지금 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 단체가, 아까도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할 때는 전경련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역협회라든가 또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만 불러다가 무슨 파트너로……

○이언주 의원 아니,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는 부르셔도…… 제가 그 얘기 드린 건 아니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제 말씀은 전경련만을 무슨 파트너로 우리가 뭐 특권……

○이언주 의원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언주 의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뭐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가 모인 것이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드러내놓고 내놓고 활동하고 이익집단으로서 우리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단체인 것인가,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불평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누진율을 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소득세도 누진도가 결코 국제 비교를 한다든가 이것이, 물론 국제 비교라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정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누진도가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우리는 3단계 누진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이언주 의원** 그 누진율은 고소득층으로 가면 누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어떤 뜻으로 말씀을……

누진도라는 것은 보통 해당 세금 전체에 대한……

**○이언주 의원**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는 누진도가 완화, 그 기울기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최고세율 구간이 좀 작지 않냐 하는, 35와…… 다른 데는 다 5%인데 3%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고 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 누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고세율 구간은 한 1%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율 구간과 별개로 과표구간이 있어서 얼마 사이를 두느냐 하는 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언주 의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우리 재정 지출이 아직, 예를 들면 복지 지출이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재분배 구조가 아직은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있는 구조로만 가더라도 조만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있는 구조하에서도 복지 지출을 좀 더 효율화하고 누수를 막고 해서 재정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언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힘은 집중되면 반드시 남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민주화를 통해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고 시스템을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힘이 집중되면 남용되고 승자 독식의 시장은 활력을 잃고 침체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권력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 시장의 조화와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의 무소속 윤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87년 민주화 항쟁과 함께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며, 98년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광역의원들과 울산북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13 총선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는 물론이고 일부 언론과 당 대표까지 나서서 중북 색깔 공세를 펼쳤지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조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헬조선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전부를 포기한 전포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현실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데 정

부는 그 해법으로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필두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해법을 찾아가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수출과 투자 등 여러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배의 측면에 있어서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또 구조 개혁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구조 개혁이라든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가계소득도 증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그리고 근로장려금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총리님께서도 성장과 분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잠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1을 보시면 작년 3/4분기부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이 정체상태이고 그에 따라 가계소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표2를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3에서 확인되듯이 올해 들어서만 50조 이상 가계 빚이 늘어나서 무려 1257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표4를 보시면 국민의정부 이후에 소득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수치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이 미흡하지 않나, 거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도표를 보여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지표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좀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견제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법안 발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정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노동 현장이 유연해지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 좋습니다.

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OECD 주요국의 고용 성장과 노동시장을 비교하면 우리 한국은 25개 국가 중에서 고용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반면에 노동시간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을 유연화시켜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한 1820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을 내는 노동자가 한 1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 한 해만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 56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용보험료를 아직 아예 한 번도 안 낸 노동자들이 한 660만 명 됩니다. 이렇게 치면 3명 중에서 2명이 지금도 고용이 유연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가 더 고용을 유연화하시겠다는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저의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현안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기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노동 현안 문제와 법적 문제가 함께 걸린 문제라서 부득이 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 충남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에서 2011년 이후에 노동쟁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3월 노동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유성기업은 과거 쌍용자동차처럼 5년여 동안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지배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 한 달 후에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안두현 그분을 해산하고 바로 유성기업 새 노동조합에 대해서 안두현 씨가 그대로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충분한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기업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새로운 노조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또 인정해 주게 되면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지위가 또 보장될 것이고 이것을 악순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데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1년 단위사업장이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이렇게 진기한 일인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측 책임자가 당연히 사법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성기업의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윤종오 의원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유시영 회장을 계속 불기소처분을 해 가지고 법원이 직접 재정신청을, 노동자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지못해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노동자들은 사측의 고소 고발로 벌써 3년 6개월의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시영 회장은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들에게는 쇠방망이를 휘두르고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법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법리가 어렵고 또 많은 판례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판단을 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었을 것이고 법원은 또 법원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법원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좀 전 의원님 질의 때도 전경련의 이야기 등 상당 부분 잘 들으셨는데,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서 하셨는데 노동계에서 즐기게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장 부분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올해 1월 달부터 8개월 넘게 거리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외주업체 변경 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도 협

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공공부문이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단가 보장 그리고 고용승계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공공부문이 대부분이고 민간부문은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침은 좋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권고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티브로드는 유료방송시장에서 32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태광그룹의 재벌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그렇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지금 5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신규 계약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승계의 책임자는 원청인 티브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관련된 C&M이나 SK브로드밴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고용승계가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힘을 좀 모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티브로드 같은 방송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어느 업종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티브로드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외면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회피한다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업자는 다음에 자격을 심사할 때 좀 페널티를 준다는가,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송사업자가 공적인 책무를 준수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오 의원** 하여튼 오늘 단위사업장 일까지 총리께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절박하게 길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봐 주셔서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올해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종오 의원**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불이익…… 압박을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동의 없이…… 동의와 더불어 도입한 기관도 있고 동의 없이 도입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률자문 등을 잘 거쳐서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장관님 봉급을 마음대로 삭감시키면 기분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물론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봉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근로조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결코 삭감을 뭐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오 의원**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전부 다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취업 규칙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지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2013년도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부서별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찢어지는 장갑을 쓰고 주사약이 새는 주사기를 쓰고 저질 의약품이 들어오고 CT, MRI 등 각종 검사 건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4개월 만에 162억 원을 추가로 벌었고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의 성과급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 그 사례가, 저도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일을 행한 데 있어서 뭐 부정할 것을 했다가 그야말로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 병원 자체의 성과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안 할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아껴서 성과급을 부당하게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병원 자체의 전체 성과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그 병원의 수입이 결국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잘못된 일이 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런 게 계속된다 그러면 환자를 과잉진료하게 되고 질 낮은 의약품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고 또 건강보험을 과다 청구해서 병원 수입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연봉제, 퇴출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파업을 예정하고 있지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과거에 철도파업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었는데요. 이런 공공부문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저성과자 퇴출 그 문제하고 성과연봉제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성과연봉제를 해서 마치 무슨 저성과자 퇴출을 하겠다는 데 쓰겠다는가 그런 것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성과연봉제 함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봉급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께서도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담당 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이것이 근로자와 그야말로 노사 간에 또 정부와 같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니, 무슨 노력을 하셨는가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종오 의원** 지금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파업 때문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그 대화가 우선 담당은 고용노동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지금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연봉……

**○윤종오 의원** 그건 고용노동부에 맡기고 지금 이것 성과퇴출제와 관련된 모든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인데 지금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성과……

**○윤종오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체이신데 이해당사자가 참가한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때……

○**윤종오 의원** 이해당사자를 참가시킨 상태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공청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 예.

지금 이렇게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당사자는 임금 삭감이 된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문제를 너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

○**윤종오 의원** 지금 일단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대화를 전혀 거부한다든가 대화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연봉제가 일방적으로 한쪽의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종오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획일적 지침으로 시행하지 않나 싶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일단 장관님 들어가시고 산업통상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윤종오 의원** 저도 울산에 있으면서 그걸 당했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지금도 우울증에 빠지셨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오늘 미방위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지진의 양산단층이 활성 단층으로 보여진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어제 지질 전문가, 지진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의 영향을 받았는지,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원전은 규모 6.5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라든가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설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 5.8의 9·12 지진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 이하였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 아무리 안전하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5·6호기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듯이 한국 사회는 벌써 전환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닫힌 정치를 극복하고 시민 주도의 열린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경련이 유착하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에는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경제인들의 단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단체만 해도 6개가 있고, 그리고 그 단체들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회원들이 모여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단체나 또 여러 경제 주체들을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도

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얘기는 또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의 현장성을 보장해 가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경제인들과 많이 만나고 사회 각계의 여러 계층과 만나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경련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제가 모르는 거야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야 물론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泰 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과 안보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정 운영에 있어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의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스마트사회 패러다임 변화 속에 놓여 있고,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인간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융합 혁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같이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는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 운영 체제와 전략도 이에 같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상황, 불확실성, 재난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이런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미래 준비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체제와 전략을 잘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의 대책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정보 교류 또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의견들 또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의견들, 안전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반영한 정책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각종…… 특별히 큰 방향

은 개혁입니다.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을 잡아서 정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泰 의원**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인구 추세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있다, 그 국가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아마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005년도에 출산을 쇼크가 왔습니다. 그때 가임여성 한 분이 1.08명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온 사회가 놀랐고, 그래서 2006년 그다음 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5년 단위로 만들어서 작년에 2차 저출산 종합대책이 끝났고 이제 금년부터 제3차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현재는 잘 챙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983년도부터 이미 우리는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05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미리 준비했다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임을 놓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과거의 많은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 지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의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평가하기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출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함들이나 부작용들도 없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진 문제에 관해서도 금년 초부터 저희 정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진에 대한 대책이 아직 미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검토를 많이 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금년 5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지진 대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주 일대의 지진 사태를 보면 여전히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진·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여기에서는 정부만이 아니고 민간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제사회와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가 기술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난망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난망은 있습니다라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언제 시작하셨…… 이 사업이, 재난망이 시작됐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파수를 확정하는 작업을 한 것은 14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강릉·정선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 3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시범실시를 했고 앞으로 도시를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부터 이 재난망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나고도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난망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재난 전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또 세밀한, 세심한 관리를 하는 이런 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泰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바로 이 재난망이지요? 그리고 이것

을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총리께서 엄중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또 부처에서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각오가 단기간에 이렇게 반짝 일어났다 사그라드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챙겨서 앞으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나 신속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지난 5년간 재난과 재해로 인한 여러 피해가 크고 작게 있어 왔습니다.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고 보는데 이 피해 규모를 추산한 적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건 여러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金成泰 의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면 보다 이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생산적인 쪽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정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예, 답변.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안전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재난과 재해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국민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만든 시스템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간에 다른 현안이 생기면 그 사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걸 체계화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계장관회의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이지만.

아까 민관 합동 회의는 민간의 역량을 함께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장관들이 모여서 정책적인 지원들을 해 나가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매뉴얼이, 재난 매뉴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매뉴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 작동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안전대책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우리나라는 아주 뛰어난 ICT 기술, 스마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재난망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그러면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 대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위를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기억,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23위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金成泰 의원** 그리고 창조경제는 우리 한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서 제4의 물결, 이런 제4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창조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우리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어떤 방향, 세계가 같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외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마는 우리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ICT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류를 해 나가고 협력을 해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국제적인 평가는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외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역점을 두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래 방향에 대한 상당한 나침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매우 취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여러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노동유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金成泰 의원** 그래서 지금 다보스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입니다. 83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낙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金成泰 의원** 그래서 우리가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비전으로 연결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으로 정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경제주체들에게도 계속 당부를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성과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예,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방향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이러한 방향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을 자고 있지요. 노동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못 따라잡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노동 개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 개혁의 과제들이 있지만 4차 산업을 일으키고 신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전제로서도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泰 의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회 개원 연설에 강조하셨고 여야 3당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金成泰 의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金成泰 의원** 그런데 야당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신속 처리, 신속·철저한 추진을 강조해 오면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노동 개혁은 어떤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노동 시장을 살려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또 나이 많은 분들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유연화와 안정화라고 하는 두 방향을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러면서 근로자들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이런 전반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다른 정책과 달리 어렵지만 꼭 우리

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成泰 의원**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어떤 법·제도의 융합을 위한 법·제도 점검을 하고 또 챙겨 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식·정보산업의 촉진을 위해서 과학전략회의도 금년에 만들었고 또 R&D도 이 부분에 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4차 산업에 대한 젊은 층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확산해 오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지금 토요타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 융합기술 상용화 과정에 과거 일본이 보이지 않는 신속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4년 출시된 토요타의 세계 첫 상용 수소차 미라이가 불과 1년 만에 당초 판매목표 8배가 넘는 3300대를 수주했는데요. 어떻게 토요타가 이런 속도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공부할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적인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成泰 의원** 일본도 우리처럼 부처 간에 칸막이 규제가 아주 강한 나라인데 아베 총리가 리더십으로 이러한 부분을 신산업을 가로막는, 융합형 신산업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신속한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던 핵심적인 행정 시스템이 부처 간 협업입니다. 칸막이 없애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우려를 드렸던 부처 이기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成泰 의원** 예, 총리 들어가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융합 혁신경제 중요성 때문에 법안 마련을 한 게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처 간의

협력과 시너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산업부와는 수시로 공동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지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의원** 거기에 유망기술·서비스 지정을 우리가, 그 건수하고 우선구매제도에 의해 구입된 제품 건수를 혹시 몇 건이나 달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소위 ICT 특별법이라고 말씀하는 그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3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1건도 없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3건 정도 있었습니다.

○**金成泰 의원** 3건 정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金成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부처 간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다시 총리 나오십시오.

저는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근간은 규제프리 개념, 성실실패 구제, 부처 간 협력의 의무화, 정부의 융합혁신경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金成泰 의원** 총리께서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의사가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법 시스템이라는 게 범정부적으로 할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역량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법 마련과 함께 현재 위기의 조선·해양·철강·건설 산업 그리고 스마트산업의 융합 전략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때를 놓치지 않

기 위해서는 국가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같이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산업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확대, 확산시켜 나가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金成泰 의원**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안과 지금 위기에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넘는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해양융합 스마트뉴딜을 제안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은 조선·해양산업의 지능형 정보통신기술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발전, 관광·레저산업이 융합된 해양융합스마트시티 조성으로 국내 기간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감합니다.

○**金成泰 의원** 향후 이러한 해양스마트시티가 1기가 건설될 때 8조 내지 14조 매출, 7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세계시장을 보면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해양융합 핵심경제 주도로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새로운 도약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관련 부처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을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관련 부처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시점은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전략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

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부 역시 칸막이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준비와 사전 대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다가 일시적으로 침체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이 가능한 순환기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구조적 위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장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5.32%였던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 4.48, 이명박 정부 시절 3.2, 박근혜정부 시절 2.93%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년 8월 공식 실업률은 3.6%인데 청년 실업률은 9.3%입니다. 그러나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느끼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체감 실업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것이 3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가 9% 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실업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시는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청년 실업률에 관해서는 정말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말 기준 체감 청년 실업자 수가 179만 명,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2%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문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서 미국 다음으로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서는 노후 대책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결국 노인빈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9.6%로서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순환기적 위기라고 보십니까, 구조적 위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측면이 혼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위기라고 하면 이른바 과거 IMF 위기라든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위기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칫하면 모두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위기의식은 느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어느 정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순환기적 경제 위기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고용도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나 순환기적 경제 위기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본 의원도 과거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가장 큰 것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서, 우리 수출도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것, 또 그 진폭이 굉장히 큼니다. 불확실성의 확대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 문제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또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까지 합하면…… 그런 문제들이 합해져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이 투자재원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감세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고 사내유보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유동자산만 6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나지만 투자는 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니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그리고 정규직들의 급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을 통해 많은 부가 대주주나 외국인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배당으로 3조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약 1조 8000억 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 상장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이 약 7조 4000억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이 내수 진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배당 자체는 그것이 다 본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삼성전자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환류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임금과, 역시 또 배당 일부는 국내 배당으로 내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법인세 인하와 이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환류세제는 결국 대주주, 경영진, 대기업 정규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고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뿐 경제 활성화의 효

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리께 여쭙습니다.

내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그래도 도입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배당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배당 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올해부터 투자나 임금 증가에 가중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그것이 효과를 또 새로이 보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금성 자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조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기업으로서는 꼭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다른 부분은 이미 투자나 이런 것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운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의 가장 큰 효과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산 11조 원의 부동산입니다.

2015년 경제성장률 2.6% 가운데 재정이 기여한 부분이 0.8%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최운열 의원**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2% 성장도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금년 1/4분기 성장률 0.5%인데 이 중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로서 재정이 성장을 겨우 받치고 있습니다. 꺼져 가는 성장의 불씨를 그나마 유지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면서 감세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국가부채가 약 4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금년 이미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총리, 늘어나는 국가부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아직도 양호하다고 자위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냥 GDP 대비 비율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아주 자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의 경기 상황이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책 수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기왕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 그러면 같은 규모의 지출을 가지더라도 더 확실한 경제효과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국가채무를 그만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줄인다기보다는 규모 증가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정 지출의 건전화, 저희가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정부 관료들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채무를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시겠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 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개탄하셨습니다.

총리께 여쭙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졸업 후에 3, 4년씩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젊은이들에게,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받는 700만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는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껴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신 취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낙담하고 비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힘차게 다시 달려가 보자 이런 격려의 의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격려의 말씀 같으면 좋은데 그것을 듣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소위 3포 세대를 자녀로 둔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최소한 나보다는 잘살 거라는 희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기업, 근로자 어느 한 경제주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지도층 그리고 소득 상위계층의 고통분담을 함께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먼저 가진 분들의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조선·해운업 위기에서 보듯이 힘없는 근로자들만 고통 분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계층 갈등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총리께 여쭙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어려움 또 비정규직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의 동참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정규직 등 고임금 그룹의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서 청년고용 확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자체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반납한다든지 인상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폭넓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감사합니다.

너무나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분으로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게 세비 삭감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0% 줄이고 배당도 20% 줄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 삭감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비를 살어나게 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경제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한 꿈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는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120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낮고 쉽게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비정규직이 고용은 불안한 대신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선택의 권한을 근로자한테 돌려줍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과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대타협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을 대폭 낮추어 줘야 합니다.

총리께 여쭙습니다.

지금 이동통신회사는 경쟁 상태입니까, 과점 상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적으로는 과점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런 과점 상태에 있는 통신시장을 개방해서 제4이동통신을 하나 허용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고 전기료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의 촉진 또 알뜰폰 활성화 등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20% 이상 높게 책정한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우리나라 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전문가인 어느 박사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지했던 학자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한국 경제에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 낙수효과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불균형 성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면서 저의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대한민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주류학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없으면 근로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입니다.

산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지금 지진으로 원전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발 또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는 날로 극심해져 있고, 폭염으로 전기사용량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또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으로 인해서 태양열 패널 수요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전의 지진 안전성이라든가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적기라고 보고 있고 또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 신·재생 발전 비중이 최근 들어 가지고, 최근 5년간 보게 되면 연평균 18.2%씩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8% 정도, 전체 발전량 중의 6.8% 정도가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앞으로 정부도 특히 학교 또 주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비율도 대폭 늘리고 또 그것 설치하는 데 따라 가지

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대폭 간소해 주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22.3%고요,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이 9%인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서 일단 OECD 국가 중에 꼴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IEA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 1.5% 수준 이어 가지고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산자부 소관입니다. 산자부가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신·재생에너지 문제의 진척이 좀 느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는 선진국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늦게 출발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좁은 국토에다가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발전의 부존 잠재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5년 들어 가지고 신·재생 발전 비중 증가율이 연평균 한 20% 가까이 늘고 있거든요.

○박주현 의원 예, 최근에 좀 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앞으로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쪽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종 토지나 뭐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렵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시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난 13년도에도 한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가지고 풀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중에 규제나 민원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 애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처랑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늘려 나갈 생각이구요.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 RP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 7월에 2020년까지 당초 6%로 되어 있던 것을 7%로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지금 정부가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최근에 제출을 했고요. 또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1%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고한 가지 제안은 새만금 발전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11%인데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될 비율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라든가 환경규제 같은 것들을 적절히 완화를 해서 계류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진 또 한수원 또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들이 좀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까 학교라든가 주택용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같은 것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새만금 지역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구역이 있다가 14년 9월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관련 부처랑 다시 한번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쌀값이 25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담아서 실질적인 대책 위주로 문겠습니다.

일본은 연간 20만t의 쌀을 해외에 원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제식량원조협약에 바로 가입하고 해외 원조 ODA로 쌀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처로 하여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가 매우 좋지 않을 때도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재난에 대한 구호로서의 일회성 지원은 적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도 재고미 해결이라는 큰 이익이 있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주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보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라도 살펴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어 있고……

○박주현 의원 일회적으로라도요?

○국무총리 황교안 오히려 우리들이 지원한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의원 우리나라와 같은 종류의 쌀을 먹는 나라가 북한·일본·중국 등 일부 국가밖에 없어서 결국 북한은 우리 쌀 문제와 관련한 주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토류와 같은 광물자원과 물물교환하는 것은 이미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고요. 보수층의 퍼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우선 대화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가능한 방법들이 있겠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주현 의원 쌀 소비 대책으로 학교 조식으로 삼각 김밥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식사는 비만 방지를 위해서도, 학습 능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출근하기 바쁜 학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기왕에 학교 급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크지 않은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고 또 쌀 소비도 크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양한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쌀이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덜 되고 재고는 쌓여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주현 의원**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 국수와 빵 소비가 늘어나서입니다. 시중에 지금 쌀빵, 쌀국수가 우리 몸에도 맞고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판되고 있는데요. 쌀빵과 쌀국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쌀이 다양한 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그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소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도 팔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박주현 의원** 지원이 필요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요.

지난번 우리 당 이용주 의원의 정치 분야 질문에 대해서 국회 추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2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이 지체되는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 추천 위원, 그중에 야당 추천 위원 두 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난 9월 초에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이 되어서 지금 선임을 위한 정부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현 의원** 원전 안전이 초미를 다투는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올 스톱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들을 해외에서 전자 결재하던 대통령의 행태와 너무 상반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여당 추천 원안위원이 부결된 것 때문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원안위 결정과는 아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추천 위원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송영길 의원 질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내사를 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보도를 봤다,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박주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쌀값 폭락으로 인해 67만 쌀 농가는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논과 농촌이 황폐해지면 우리 국토와 생태와 환경이 함께 죽는 것입니다. FTA를 통해서 국가 경제의 이익을 얻었다면 FTA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가야 마땅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또한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원전 안전 문제와 미세먼지,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로 삼아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헬조선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환율, 금리인하, 부동산 경기부양, 법인세 인하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 대책들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폭증과 대기업 사내유보금 폭증 같은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내수 소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산업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그 비중은 세계 1위가 됐는데 효율성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계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지만 결과는 부패의 먹이사슬만 배가 불렀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산업 지원과 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면 정부는 예산 배분 과정에서 양극화를 해소해서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정부가 조세와 재정을 통해서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불평등의 45% 정도를 개선하는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이 31%, 신자유주의 중주국인 미국조차도 24%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9.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소득세 누진율과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9.2%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뭘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조금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소득세만으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에 의한 정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이 결코 낮다고는 보지 않는데 제가 정확히 이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OECD 평균보다는 비교적 낮은 부분은 아마도 재정지출 쪽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우리나라 예산이 대기업과 최상위권 대학과 부자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는 데에 몰아주는 예산이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몰아주는 예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내수를 바탕으로 투자도 살아나고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까지 예산으로 특히 대기업을 지원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조세감면, 예를 들어 법인세의 조세감면 같은 것이 수출 산업,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기업 쪽의 조세감면 비율은 아주 대폭 낮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복지지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가 좀 더 늘여가는 추세이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지출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더 기울여서 재정지출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지금 9%에서 내년 13%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급격히 또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꾸준히 올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상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그것은 국감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주현 의원** 비과세·감면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중소기업 지원이나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일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제도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것,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다 돌아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R&D 감면의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지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R&D는 대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액 면에서는.

**○박주현 의원** 저축 지원 비과세·감면은 바로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비를 늘려야 할 때고 기업은 돈을 잔뜩 쌓아 놓고 있는데 저축·보험·개인연금 이런 것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2조 5000억 정도 돼요.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물론 소비를 강조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서민층에, 그런 것은 그야말로 서

민중에 집중된 것인데요 그 계층에 대해서는 저축을 또 어느 정도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그것 추가로 국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20조나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그런데 굳이 재벌기업만 혜택을 보는 3조 가까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또 해 줘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썽요, 그것이 꼭 재벌기업만 혜택을 본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그렇습니다마는 절대 규모로는 큰 기업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에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초…… 정말 위험성이 크고 해서 기업들이 회피하는 것에,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하는 것에 주로 저희 정부가, 공공부문이 그야말로 직접 투자를, R&D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라도 실제로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민간 부문이 하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물론 세액공제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비과세·감면 액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게다가 내년 예산안 재정 적자가 28조입니다. 이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담뱃세로 서민 증세는 이미 했으니 법인세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비과세·감면의 비율이나…… 비율은 늘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법인세의 문제는 그것이 지금 과연 세수를 세울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법인세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얘기를 또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자, 화면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투자·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안 쓸 거면 돌려 달라’고 말하고 법인세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법인세율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만 낮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낮춰 왔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그야말로 제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이 법인세율 인하 같은 것이 없었으면 그나마 투자가 더 저조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국내외 연구 결과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오히려 향상시키고 그 반대는…… 그 반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도 저조하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저희가 말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이고 그것에 의해서 일부나마 효과를 봤다, 배당 쪽에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것을 임금이나 투자 쪽으로 돌릴 수 있게 가중치를 바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그 세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12년에는 법인세가 두 구간에서 세 구간이 되면서 법인세 감소 액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23개국이 단일세율을 취하고요, 8개국이 2단계 세율을, 3단계 세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국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주현 의원 법인세 과세 구간을 세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아직 하지 않았습시다마는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국회에서 세법을 고칠 수…… 저희도 충분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인하된 기간 동안에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였고요.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내수와 투자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늘었다고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화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17.2%에서 지난해 12.9%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환원하고 최고세율 25% 환원하면 연평균 7.6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썬요, 그 7.6조 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만 본다 하면, 세수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세율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는 세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금으로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지금 세금 낼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한계상황의 대기업들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국책은행들이 부실화되니까 그것을 매우느라고 또 수습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국책 금융기관들의 대출과 보증이 5년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그중에 대기업 대출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이것을 이 숫자로만 본다고 하면, 물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시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한계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살린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러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의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이 숫자에서 나온 것은 한계기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어렵다 해서 끝없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의 이른바 정책금융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정상적인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벤처 등 신산업 지원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망해 가는 대기업의 구명줄 노릇을 하는 것은 정책금융 기능과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원칙적으로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벤처 이런 부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물론 어디까지나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급한 경우에 또 부득이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당장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방치했다가 그것이 또 국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때는 대비를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은 옳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근로자 1900만 명, 자영업·소상공인 300만 명, 실업자들, 청년들 모두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 왔고 형편이 나았던 극소수의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대기



업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박주현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계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박주현 의원 대기업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대답을 드렸고요. 지금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전체 대기업을 다 망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한계기업에 대한 어떤, 그중에 대기업도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시장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그런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야말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을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을 대부분 짊어지는 현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개발시대의 낡은 관행인 대기업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총리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지나치게 비대한데 이것을 축소·통합하고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사회정책의 공공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문제는 그것은 조금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금융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금융이 그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것이 중심이라기보다도 정책금융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를 먼저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결과로서 정책금융이 자연

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정책과 예산은 경제개발에서 사회개발로 이미 오래전에 중심이 옮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80년대 개발시대 그대로여서 경제부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회부분의 공공성도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썽, 칠팔십년대의 개발시대와 우리 정부조직이 비교를 해 보시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꼭 필요한 정부조직은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그전과 같이 성장 위주라기보다는 사회지출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고 그에 맞추어서 앞으로 정부조직이라든가 공공부문이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예산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조 개혁을 한 해 두 해 늦출수록 치러야 할 비용만 더욱 커집니다.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또 능력 이상으로 시장의 산업구조 개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 역량을 예산구조 개혁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배가해야 합니다. 과거 개발시대의 낡은 정책수단으로 경제 활성화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국가재정의 가장 우선과제를 양극화 해소에 두어야 합니다.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경제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고액 연봉과 온갖 부정부패로 예산을 낭비하는 개발시대의 잔재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 북핵 실험, 경제 외 상황도 많이 불안합니다. 아니, 이제는 불안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면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생활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 생활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이래저래 빚을 질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57조로 전년 말 대비 54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집단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이번 대책에는 주택시장 관리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금융시장 리스크만 관리하다 보면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때는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가계부채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책 당국은 반드시 매뉴얼 수준의 세세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이제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전세 문제 역시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은 숨겨진 집주인들의 부채입니다. 임차인은 늘어난 전세보증금 때문에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부채가 있습니다. 역전세나 강통전세를 대비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의 리스크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에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8월 25일 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금융 공급이기 때문에 주택 분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최초로 주택시장과 관련한 대책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해서 담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양 택지의 공급이라든가 혹은 중도금 보증한도, 대출 건수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지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인식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오히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집단대출이라는 것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8조 원 정도의 집단대출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만 해도 전체의 절반이 주담대 증가의 절반이 되는 약 12조 원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상반기인데 12조 원이니 작년 전체보다도 더 많아진 것이지요.

이런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의 LTV나 DTI 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분양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 집단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증가세를 바로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집단대출 증가

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0.25%니까 지난 5년간 1.7 정도 됐던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지적인 현상으로 가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권을 의미하는데요. 수도권이 0.6 정도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특히 강남 4구의 재건축, 이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되어 있지만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다음은 가계부채 중에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40% 정도 폭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 7·4 대책 이후에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줄었었는데, 왜 다시 제2금융권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제2금융권 대출이 다시 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저금리 현상이 되면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에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에 약 78bp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6월 수치로 보면 25bp로 금리 차가 거의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 가나 은행 가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권의 주담대 역제를 위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제 장치가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LTV·DTI를 완화했을 때는 제2금융권에 있던 수요가 은행권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은행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따라서 그 수요가 2금융권을 찾아가는, 보다 손쉽게 대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그다음에 지금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처럼 주택과 무관한 대출의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느는 이유는 역시 경기침체가 오래되다 보

니까 소득이 줄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빚을 내는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은행으로 보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신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는 앞서 여러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현재 한 289조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담보의 여력이나 혹은 연체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직까지 부실화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앞으로도 여신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다 부채가 줄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가계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부채가 줄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성장을 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 부채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 위험성을 주목해야 하느냐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즉 적정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혹은 질적으로 이것이 리스크가 되어서 우리 전체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화하지 않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즉 총량대출을 하거나 급격하게 가계대출을 떨어뜨리게 되면 굉장한 여파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금융 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 국민들 전반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지요.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가령 여신을 회수하게 되니까 담보물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에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서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든가 또 과도한 부채를 상환하게 하면 그로 인해서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다든가 하는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저신용층, 저소득층 즉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대책은 그냥 급격한 축소보다는 질적으로 이것이 리스크가 없도록 고정금리, 분할상환 이런 체제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증가 속도의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단어를 쓰셨습니다마는 '연착륙'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일단 시장에 충분한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저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 55%를 차지하는 월세입니다. 월세로의 전환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독특한 임대시장이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을 아까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 집주인들이 전세 방식을 꺼리면서 전세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이 치솟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세에서는 대출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세주택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공백을 주택담보대출로 메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분양시장의 집담대출이나 매매로 인한 대출 말고도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월세 비중이 55% 가까이

되는 이런, 완전히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입자는 전세금 상승에 따라서 전세자금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월세입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지요. 이러한 수요가 결국은 주택 임대방식 변화에서 우리가 가계부채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양적인 관리에 앞서서 이런 구조 변화가 조금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택담보시장은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수립하실 때에는 반드시 월세시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이 되었으면,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현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신규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분할상환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해 가지고 그 분야의 가계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혹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월세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 여유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월세입자 투자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주택시장 안에 머물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게 한다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그런데 월세 투자품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중에서 향후 주택공급 물량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혹시 대

책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번 주까지 주택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8·25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7월 달, 8월 달에 비해서 소폭 확대되었지만 예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아마 상승 원인도 계절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강남 4구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의 상승률이 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9월 현재까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었다든지 또는 주변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장관님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시장 전체로 보면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과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양시장만 축소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시장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그런 유동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강남 4구의 분양시장 그리고 특히 재건축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그런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심화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적절한 조치를 또 강구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지금 인허가 물량이 연간 70만 호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급 관리에 착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관리도 동시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는 사실은 집담대출을 통한 간접적인 수요관리 대책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분양시장의 실질적인 수요 관리는 없었다고 보고 있는 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분양시장에서의 수요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금리 유동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을 가 보니까 분양계획이 이루어지면 이 중의 절반가량이 분양권을 전매를 합니다. 전매기간이 아닌데도 버젓이 합법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국토부 방식으로 가서 점검을 하셔서 발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양도세는 지금 오히려 매수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운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양도소득세를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대충은……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청약제도라든가 분양권 전매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일단 당분간은, 8월 초부터 저희들이 청약시장에 대한 불법,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 오고 있는데다가 8·25 대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식을 통해서 분양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이런 시장이 좀 더 과열 현상이 심화된다면 확산되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단지 청약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매제한제도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25 대책이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성과와 또 주택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일부에서는 지금 전매기간을 확

대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분양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매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분양권을 등록된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돌아가셔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 관련 정책과 법안은 모두 과거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제도는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하락, 과잉 공급, 역전세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차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큼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시장 관리를 단기적으로 시장의 그런 가격 등락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인 주택수급 상황과 시장 전반의 그런 가격 동향을 장기적인 수준에서 보면서 이렇게 관리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택시장 정책의 목표입니다.

○**김현아 의원** 부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차원에서 정책이 검토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 건설투자 부분의 기여율은 무려 5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전체로 볼 때 건설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총리님, 만일 내년부터 건설투자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투자 계열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것이 되겠고요. 또 내년도에는 건설투자 자체가 둔화가, 보

시는 여러 요인 때문에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내수가 그래도 조금 회복이,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것으로 완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투자가 올해 좀 과했다는 것이 분명한, 물론 과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둔화는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의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법인세율이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논의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도외시하더라도, 우선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다들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가 올리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이미 감면을 많이 정비하고 그래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점을 또 유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도 있고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율만 볼 게 아니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노동시장 환경은 어떻습니까? 즉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또 기업의 투자 여건 같은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고용의 유연성은 비교적 우리나라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물론 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낮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 그 나라들의 고용 유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정부도 법인세 문제를 다루실 때

단순히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만 보지 마시고 제반 사회·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노후시설물의 안전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의원 내진 보강을 포함한 노후 사회기반시설물의 성능 개선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무슨 구체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일 텐데, 물론 구체적인 사업이 다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예산 전체로 본다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에 SOC 전반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내진 보강 예산 쪽은 강화되어 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량이 필요한데 그런 쪽도 예산 지원은, 예산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지금 일단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대피공간으로 삼고 있는 게 학교와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이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난에 취약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도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영향을 주면서 저희도 살펴보니 사실 굉장히 공공건축물, 특히 학교 이런 곳은 의외로, 물론 과거에 그것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낮은 수준이다,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량을 위한 이런 예산 확대는 정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의원 저는 우선적으로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에 집중 투자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공간에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서 평시에는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대피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이제 더 이상 SOC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안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SOC 예산의 규모 이런 데서부터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질적인 면으로 SOC 예산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김현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와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경제라도 튼튼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종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반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경제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정치가 경제를 멈춰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새로운 경제활성화법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 개혁 4법 등이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장관들 자질 검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에 대한 업무 능력과 성과 평가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이 지경이라고 내 탓이나 남 탓이나,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각 부처가 장관을 중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도록 국회가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것도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노동계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분담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고령층에게 자꾸 현금, 더 많은 현금을 주는 정책 대신 청년들, 경력단절여성들, 50대 60대, 아니 건장한 70대들까지도 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고, 재취업 고용시장도 넓혀야 합니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청년도 살고, 노년층도 살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성장의 늪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자꾸 머뭇거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은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산업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은 끊임없이 희생과 양보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대권주자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데 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오늘까지 국회 시정연설을 세 번, 네 차례 대국민담화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FTA 협정을 조속히 인준해 달라는 채근만 있었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없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도 농업·농촌에 관해서 대표연설에서 할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농업·농촌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풍년이 들면 우리 농민들은 기뻐할 틈도 없이

가격 하락에 울어야 합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면 정부는 신속하게 수입을 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올해 쌀값이 폭락해 가지고 걱정이 많은 것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쌀값이 저하되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오늘 이 바쁜 수확기에 우리 농민들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의원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금년에 아마 풍작이 예상됩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점과 또 반대로 쌀 소비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의원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부분적인 생산과잉도, 소비가 감소하는 것도 해마다 들어와야 하는 MMA 물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 쌀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보고서를 만들 때 “이대로 가면 해마다 70만~80만t이 남는다. 그래서 쌀 생산을 줄여서 70만ha로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다 맞는데 그대로 한 것은 쌀을 관세화하고 시장을 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의원 지금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쌀 생산이 적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쌀 소비를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기본 구조가 필요하고, 차



이가 생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나 여러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어제오늘 뉴스를 보면 진흥지역 절대농지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농지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제가 계산을 좀, 보고를 들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현재 정부의 보고서나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나 종합을 해 보면 170만ha를 적정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0만ha입니다. 올해 6월까지 8만 5000ha를 진흥지역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적정 쌀의 양이 얼마나, 그런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그러나 또 쌀도 우리 식량안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저는 절대농지를 줄이는 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쌀 재배면적이 자연 감소로 2만ha가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1만 7000ha가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77만 9000ha가 쌀 재배면적이인데 70만ha를 적정 쌀 재배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줄고 있는 이 규모도 3~4년 뒤면 쌀의 생산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를, 기반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감소분을 검토를 하고 그런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권 의원** 농업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 쌀

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4대강을 대기업과 토건세력의 먹잇감으로 제공했듯이 이제 농지마저도 대기업과 건설업체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태를 망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만약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유언비어입니다. 이 정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그 말을 어떤 그대로 믿겠습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변동직불금 부담이 커지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쌀값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까.

올해 정부가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을 4만 50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우선지급금은 현장에서 기준가격이 됩니다. 농민신문에서 ‘이 우선지급금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시장의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작년 수준에 동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지급금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산지 쌀값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산지 쌀값이, 현지 쌀값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우선지급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산지 쌀값이 높았던 작년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적인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권 의원** 5만 2000원 하던 것을 정부가 4만 5000원으로 고시를 하니깐 민간 RPC에서는 4만 원, 3만 5000원, 3만 원까지 매입을 합니다, 우선지급금으로. 이것은 시장의 기준가격이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쌀값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쌀값이 많이 높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던

정책과 지금 산지 쌀값이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우선지급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되 최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이 부분을 잘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 물량을 신속하게 격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표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최근 2년 동안의 쌀값의 변화입니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이 화살표가 위로 있는 거예요—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 물량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늦게 하니까 시장가격의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여기 꼭지가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 했더라면 작년에 훨씬 더 개선 효과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물량을 작년에 35만t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에 쌀이 얼마가 나올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측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를 사들이겠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검토를 해 보도록 부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재배면적이 이미 나와 있고, 농진청에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쌀값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권 의원** 현재 정부 쌀 재고량이 175만t, 민간이 최소 25만t, 200만t의 재고가 있습니다. 적정 수량이 72만t 내지 80만t이라고 합니다. 1만t을 더 저장하는데 1년에 32억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t 이상을 더 저장하게 되면 1년에 4000억의 추가 예산이 발생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이 4000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쌀을 처리하는 것이 쌀값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료로 쓰는 것, 가공용으로 쓰는 것, 해외에 주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그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고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지원제도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얼마나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 60% 정도…… 제가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그렇지요. 1년에 900억 정도 예산을 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총계……

○**김현권 의원** 7만t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계산상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양의 30%밖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권 의원**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이고 뜻있는 방법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양곡지원제도를 늘려서 영양을 개선하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계산하면…… 거기다가 빈곤아동, 독거노인까지를 합치면 최대 20만t까지 추가로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지원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쌀을 보다 값지게 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 제가 어떤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거기까

지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현권 의원** 미국 인구의 15%가량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생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그것을 모색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도 아마 미국의 푸드 스탬프 비슷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물량 처리의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 지원입니다.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선행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추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드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나 범위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에 전념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국제협력기구와 협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협의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해마다 가공용 쌀을 24만t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식용으로 생산해서 2년을 저장했다가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게 참 부득이한 결과입니다마는 그렇게 묵혔다가 다시 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8%입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쌀만을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잡곡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밥상을 차려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요 곡물들의 자급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쌀의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처럼 묵혀서 가공용으로 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과거에도 활용을 해 봤는데 당시에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도입이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두 차례 실시했던 때의 그 부정적 요인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의원** 하다가 그때 왜 안 했느냐면요. 쌀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쌀이 모자라서.

저는 제가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생산조정제를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현권 의원** 내년 예산에 쌀생산조정제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농림식품부에서 요구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시범사업

을 다시 해 보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 3만ha를 하면 됩니다. 9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4000억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취약 계층의 예산을 늘리는 것도 4000억 내에서, 이 900억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화는 깨졌습니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일부 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다 압니다.

농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농업의 가치는 새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주선** 김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 의원(288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용 래
노 회 찬	도 중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흥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흥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욱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욱	윤 중 오	윤 중 필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회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시 재석 의원(124인)

강병원 강석진 강훈식 경대수  
 광대훈 광상도 권미혁 권석창  
 기동민 김경수 김규환 김기선  
 김두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수민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종석  
 김종태 김종훈 김중로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문희상 민홍철 박경미  
 박남춘 박맹우 박병석 박성중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찬우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기석 송석준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재철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윤상직 윤영석 윤영일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양수 이완영 이원욱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종명 이진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현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석춘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세균 정용기 정유섭  
 정재호 정종섭 조배숙 조승래  
 주광덕 주승용 진영 천정배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추미애  
 함진규 홍익표 홍일표 황희

○속개시 재석 의원(79인)

강병원 광상도 김경수 김경협  
 김광림 김규환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찬 김세연  
 김수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정재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노웅래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수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찬대 백승주 백혜련 서영교  
 소병훈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안철수  
 오영훈 유민봉 유승민 유은혜  
 윤상직 윤영일 이동섭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현재 전재수 전해철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유섭 정진석  
 조경태 조승래 채이배 최연혜  
 추경호 홍영표 홍익표

○산회시 재석 의원(87인)

경대수 고용진 광상도 권미혁  
 권철승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중희 김철민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남인순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선숙 박성중 박완주  
 박인숙 박정 박주선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신용현  
 안상수 양승조 염동열 우상호  
 위성곤 유민봉 유승희 윤영일  
 윤종오 윤종필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상민 이양수 이용득  
 이영주 이용호 이우현 이은권  
 이인영 이종배 이철우 이학영  
 이현승 인재근 전현희 전희경  
 정동영 정유섭 정인화 정진석  
 정태욱 조승래 주승용 최도자  
 최명길 최인호 홍문표

○출장 의원(1인)

이정미

○청가 의원(9인)

강길부 강효상 김삼화 우원식  
이종걸 정운천 정춘숙 최경환(새)  
하태경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고사항】

○의안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이정미·김종대·김경진·어기구·박남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황주홍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김수민·백재현·김종희·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철승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김두관·박광운·이용호·이찬열·고용진·최명길·안호영·위성곤·김해영·박주민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 의원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윤호중·이학영·홍익표·최명길·이찬열·손혜원·전현희·김해영·박용진·고용진·김현권·이용득·정성호·김상희·금태섭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민홍철·김경협·서형수·안규백·이훈·이개호·이연주·이해찬·임종성·정인화·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9. 21. 정부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

민홍철 의원 발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정동영·김중회·김경진·박경미·김삼화·노용래·김광수·최도자·박주민·박주선·서영교·윤종오·소병훈·정성호·최경환(국)·심재권·박덕흠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이현승·윤상현·이은권·유기준·박찬우·김성원·배덕광·정유섭·김정재·함진규·권석창·정태옥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신용현·황주홍·최경환(국)·정동영·주승용·채이배·이용호·정인화·오세정·김관영·장정숙·박준영·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이언주·이훈·양승조·최운열·이춘석·안규백·백재현·문희상·김철민·원혜영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염동열·이종명·윤종필·박덕흠·김명연·나경원·강길부·박명재·곽대훈·김영우·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김현아·김관영·정동영·정갑윤·문진국·박명재·최경환(국)·백혜련·오신환·이우현 의원 발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 9. 21. 정부 제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염동열·박명재·박대출·박덕흠·김명연·곽대훈·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유기준·

정태옥·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제윤경·민병두·위성곤·서영교·윤종오·황주홍·표창원·고용진·권칠승·우원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제윤경·서영교·민병두·위성곤·윤종오·황주홍·표창원·권칠승·고용진·우원식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6. 9. 21.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용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21.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윤종오·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김수민·백재현·김중회·최경환(국)·정동영·김삼화·이동섭·신용현·권칠승·김해영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양승조·

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최연혜·유기준·정태욱·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나경원·이종명·황주홍·염동열·황영철·金成泰·박덕흠·이은권·전희경·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4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2016. 9. 21. 우상호·노회찬 의원 외 130인 발의)